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8

Vol.2 | No.3 Fall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해빙 : 실제와 전망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아세안과 '제3의 언변들링' : 러시아의 시각

서구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동방으로의 전환' 전략

新 지구전(持久戰)을 논함

중국 : 새로운 발전 단계

아태지역과 러시아

시진핑 vs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

환태평양 지역의 발전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시각

한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특강 참가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ussia Policy Review

## 2018

Vol.2 | No.3 Fall

『러시아 폴리스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의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방향성, 전문성, 확장성을 지향하는 선별된 자료를 소개해주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6호 2018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훤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훤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한반도 해빙 : 실제와 전망  
올레그 다비도프 | 3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올레그 다비도프 | 6

아세안과 '제3의 언변들링' : 러시아의 시각  
예브게니 카나예프 | 9

서구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동방으로의 전환' 전략  
비탈리 슈비코 | 15

新 지구전(持久戰)을 논함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20

중국 : 새로운 발전 단계 | 25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25

아태지역과 러시아 | 28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 | 28

시진핑 vs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 :  
미국과 무역전쟁 속 중국의 새로운 발전단계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33

환태평양 지역의 발전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시각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 45

한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  
황성우 | 54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특강 참관기  
이양경 | 62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한반도 해빙 : 실제와 전망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아세안과 '제3의 언변들링' : 러시아의 시각

서구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동방으로의 전환' 전략

新 지구전(持久戰)을 논함

중국 : 새로운 발전 단계

아태지역과 러시아

시진핑 vs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 :  
미국과 무역전쟁 속 중국의 새로운 발전단계

환태평양 지역의 발전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시각

한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특강 참관기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2-2009-1-B00005)

---

# 한반도 해빙 : 실제와 전망

---

올레그 다비도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국과 관계 개선 및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완전히 정책을 전환한 이래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남이 있었고 무엇보다 북미 간 전례 없는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이로써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고 장기간 지속됐던 역내 긴장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큰 진전을 보이고 있는 영역은 남

북관계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따르면 올 가을 예정된 문대통령의 공식 방북일정에 맞춰 남북한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공동의 번영’이란 무엇보다 호혜적인 경협이 재개 및 발전을 의미한다. 이미 남북한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무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남북한 간 노선 연결을 위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철도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교류

가 재개되고 있다. 그간 단절됐던 국방분야에서도 남북한 간 접촉이 시작됐고 서해 해역에서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한 함정간 해상 핫라인도 복원됐다. 그 외 올해 8월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 단일팀을 결성하는 문제나 이산가족 만남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 문대통령의 방북 중에 1953년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폐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해 합의할 것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소식이다.

한가지 중요한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 모두가 희망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현재는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및 미국과 그 동맹국(한국 포함)의 일방적인 강력한 대북제재로 인해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상태다. 남북한이 아무리 좋은 경제 프로젝트를 만들어낸다 해도 앞서 언급한 장애물,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만 실행국면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매우 요원하고 어려워 보인다.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 핵 잠재력 해체 일정과 그 과정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얼마 전인 7월 6~7일에도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비핵화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회담에 대한 양측의 평가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게 ‘안녕과 번영’을 대가로 신속한 핵무기 해체를 요구했다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은 단계적이며 동시적인 비핵화를 주장했을 것이다.

북미 간 회담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일정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한 즉시, 북한 외무성은 장문의 성명서를 내고 이를 반박했다. 북한

은 미국이 일방적인 압박을 가하는 반면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건설적인 제안은 없었으며,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제안한 새로운 접근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강도적’이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회담을 마친 후 곧장 일본 도쿄로 건너가 한·일 대표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한·미·일은 북한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이를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두 정상이 서명한 공동 성명서가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것, 그리고 두 정상이 연출한 분위기가 전례 없이 성급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북미 간 긴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북미 공동 성명서에 명료한 정의와 문구가 없다는 점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향후 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양측이 극단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줬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북한이 자신의 이익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향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 중에는 이에 대해 정반대로 평가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여기에 한몫을 더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의 만남에서 김정일과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특유의 칭찬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유능한 정치가이며 그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잘 통했다”고 했다. 또한 그간 최대한 짧은 시간에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

해야 한다고 말한 바와 달리 비핵화 협상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적이고 번덕스런 발언이야말로 보좌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년 반 안에(즉 트럼프의 현 임기 안에) 북한의 핵 잠재력이 해체돼야 한다고 했으나 불탄 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선의만 갖고 있다면 1년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공식적으로 단 한차례도 일방적 비핵화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18년 4월 20일 열린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3차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더 이상 핵미사일 실험이 필요 없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및 발사체 완성이라는 목표를 모두 이뤄 안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의 정책 변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대국들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이제 문제는 향후 미국이 북한에 휘둘러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이다. 분명 북한은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공식 협상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북한 외무성 성명에서 ‘아름다운 우정을 쌓은’, ‘계속해서 신뢰하는’ 등의 트럼프를 향해 우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게임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에서나 그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아침에 가까운 발언을 한 만큼, 만약 여기에서 후퇴한다면 체면을 잃을 수밖에 없다. 즉,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내심이 남아있는 한 혹은 미국의 엘리트 정치인들이 북·미 간 회동 결과에 흥미를 잃지 않는 한 북·미 간 회담이나 접촉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고위급이 아닌 보다 낮은 수준, 예를 들어 현재와 같이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는 실무급 수준에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이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회담을 이어가도록 부추길 것이다. 회담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역내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며 김정일 위원장이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한국과 중국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몇 개월 동안 훌륭한 외교적 게임을 펼쳤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최대 목표인 제재 해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가진 회담의 어조로 판단하건대, 북한은 자신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면서 미국에게 추가적인 요구(달리 말하면 양보)를 요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와 같은 행동 패턴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북한 지도부가 정적들에게 사용하는 협상 전술이다.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학 박사

Jh9905@daum.net

- 올레그 다비도프(A.V. Romanov) (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Корейская оттепель: реал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 출처 : IMEMO 시사논평 (2018.9.7)

#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올레그 다비도프

오랜 공백을 깨고 올해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회담 결과, 한반도의 전반적인 정치 환경은 다소 개선됐으나, 향후 평화협상의 전개를 고려하면 상황은 아직 답보 상태다. 북한은 로켓 발사 및 핵실험 중단 등 일련의 생산적 행보를 이미 실현했다고 발표하며, 무엇보다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도입된 제재를 해제하고 완화하는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 측이 상응하는 대응을 해줄 것을 주장한다. 미국은 북한이 취한 조치가 불충분하며, 북한이 비핵화 부문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협력의 재개 및 발전을 위한 수많은 프로젝트들도 대북 제재로 인해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답보 상태는 북한 지도부의 불만을 더욱 야기한다. 현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긴장 심화와 새로운 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향후 한반도 문제 조율 과정에서

러시아가 제외되는 것인데, 한반도 '페이선스'의 당사국들은 해결책 모색 과정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것에 특별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중국, 한국, 북한, 미국과 접촉하게 된다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일련의 제안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 러시아는 북한이 주도적으로 자국의 핵시설 및 핵물질을 신고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러시아, 중국, 미국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그들이 최종 리스트를 확인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현 단계에서 핵탄두 수량 및 종류가 명시된 목록의 제출은 고려되지 않는다). 동시에 IAEA 사찰단을 영변 핵시설로 초청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IAEA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북한에 제안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일련의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제재의 해제를 포함해 제재 완화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개성공단 차원에서의 남북 협력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북한에게 매우 중요하다.

(2) 영변 핵시설에 있는 5MW급 가스 흑연 핵 원자로와 연료봉 생산공장,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 등 제반 시설의 불가역적 폐쇄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며, 이 조치로 인해 북한은 본질적으로 무기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을 수 것이다. 북한에게도 이 조치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원자로가 사용연한(30년)이 넘도록 가동되고 있고, 원자로의 노후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은 이 원자로를 폐쇄할 기술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핵 원자로 생산국들의 전문 기술과 지원이 요구된다. 이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참여하는 관련 국제단체를 구축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북한의 사용 후 핵연료 및 기타 핵물질, 핵부품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수송해 보관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 같은 가상의 단체에서 우리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플루토늄 및 무기 생산을 위한 핵 프로그램 이행을 중단하는 대가로 북한에게 대규모 경제 및 에너지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초창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와 제1718호를 제외한 국제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북한을 이러한 방

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국 또한 대북 경제·통상관계를 제한해 온 제재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

(3) 한반도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제안이 가능하다. 현재 이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상당히 불확실한데다가 모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게다가 일련의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한국전쟁’(1950년-1953년)을 종결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정치 선언문 형태로 조속히 체결하자는 이른바 위협하고, 허황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언급해 둘 점은, 그 누구도 조약 내용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측은 북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신뢰를 강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비핵화과정의 실현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관련국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 해체에 강한 추동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이런 ‘협소한’ 모양의 평화조약을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은 한국전쟁에 종지부를 찍은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들을 전개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9월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일종의 선언문 채택의 가능성이 검토된다. 한국은 또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러시아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을 다시 잡아 이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혹은 파트너 국가들과의 양자 접촉 차원에서, 온전한 평화협정 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인 회담을 시작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수 있다. 한 트랙을 다른 트랙에 굳이 결부시키지 않아도 좋으니, 이러한 회담을 비핵화 회담 과정과 병행하자는 제안도 가능하다.

회담 과정에서 해결돼야 할 주요 문제는 아래와 같다.

- DMZ 지역을 남북 간 정상적인 국경지대로 변경하는 문제
- 남북 간 서해 해상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 조율
- 남북 간 정상적인 국교 수립, 자주적이고 동등한 국가로의 상호 인정과 각국의 헌법 및 국내법 관련 부분 개정, 외교 사절단 교류 및 기본 조약 체결
- 북미, 북일 간 공식 관계 수립에 대한 문제 해결
- 한반도 평화 유지와 남북 간 분쟁 상황 예방을 책임지는 효율적인 국제 메카니즘 구축
- '유엔사령부' 존속 및 주한미군 향후 주둔 여부

평화 회담 참가국 및 평화협정 체결국에 관한 문제는 추가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러시아의 참여는 조약 체결국으로서든, 조약 이행의 보장국으로서든 조약 체결을 포함하는 모든 단계에서 필수적이어야 한다. 조속

한 '종전에 대한 정치 선언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국가들이 시작한 행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개별국들 간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협정들이 오로지 남북관계 조율에만 관련되고, 6.25 전쟁에 마침표를 찍는 협정으로서만 검토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데 입장이다.

(4) 관련 강대국들 간 행동의 불일치는 여전히 한반도 문제 논의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큰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러시아, 중국,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고, 그리고 북한이 원할 경우 북한에도 개방되는 '상시 가동 메카니즘'을 차관급 차원에서 구축하는 것이다. 이 메카니즘의 과제는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해 당사국들의 행동을 조율하고, 합의된 해결책을 마련하며, 또한 조속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총체적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광범위한 한반도 문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무게감이 보장될 수 있고,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평화 보장 체제 구축과 관련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도 러시아의 국익이 고려될 수 있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 О политике России в Корее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8.18)

---

# 아세안과 ‘제3의 언번들링’ : 러시아의 시각

---

예브게니 카나예프

---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정책 성공은 현 단계 세계화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얼마나 그 궤를 같이할 것인가와 연계돼 있다. 그 도전들 중에는 소위 ‘제3의 언번들링(The Third Unbundling)’ 문제도 포함된다. 사람들 사이, 무엇보다 먼저 경제 혁신과 하이테크놀로지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발생하는 접촉을 한 단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방향에서 아세안 정책을 개념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망할 것이며, 아세안에 가입한 10개 회원국들이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내놓은 구체적 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세안 정책의 성공 여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및 향후 전개될 세계화의 방향과 얼마나 굳건하게 연계될 것인가와 상당 부분 잇닿아 있다. 볼드윈(R. Baldwin)은 “The Great Conver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New Globalization”(위대한 통합. 정보기술과 신세계화)라는 논문에서 이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볼드윈의 논문에 대해서는 여기서 깊이 파고들지 않을 것이다. 대신 독자들에게 일

독을 권하면서 볼드윈의 논문 가운데 핵심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것은 ‘국가든 회사든 세계를 무대로 하는 활동가들이 정말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가 가까운 미래에 개인들 사이의 접촉, 특히 경제혁신 분야에 종사하는 하이테크놀로지 전문가들 사이의 접촉을 진짜 활성화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개인 간 연결(people-to-people connectivity)’이

라 명명되는 이러한 발전 방향은 아세안의 미래 플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은 앞으로 다국적 기업과 더 많은 경쟁을 해야 하며, 동남아 고유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아세안 앞에 제기되기 때문이다.

## 개념 차원

아세안 가입국 국민들 사이에 접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아세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요구는 아세안의 발전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문건들 속에 반영됐다.

2025년까지 개인 간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아세안의 기본 계획에는 연계성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방법, 그리고 수요 등이 정식화돼 있다. 특히 세계적 수준에 부합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낼 수 있는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것, 신기술에 기반하는 경제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직업군을 창출하는 것, 대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군을 창출하는 것,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세안 역내 노동력 이동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뤄졌다.

2015년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정상회의는 2025년까지 아세안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세안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북아 안보 강화(정치와 안보 분야), 그리고 아세안의 원칙과 가치규범 확산, 아세안 가입국의 공통 정체성 만들기(사회와 문화 분야) 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개인 간 접촉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 간 접촉은 인권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프로젝트나 국내외 행사에 참여하거나,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단체에 참여하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는데 기여하는 통로가 된다. 개인 간 상호작용은 '수십 개' 국가들의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가·개인·사회단체들이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 세미나를 조직하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 교류를 증진하는 등 갈등을 조정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 안보와 외교 문제에서 각 국가나 단체들의 입장을 통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개인 간 상호작용은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아세안 경제공동체는 그 설립 목적을 아세안의 경제적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아세안의 미래 프로젝트에서도 개인 간 접촉 활성화가 중요하다. 동북아 국가경제와 아세안 경제발전의 핵심동력 중 하나인 국경지역무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세안 역내 금융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 간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나 CEO의 이동은 아세안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는 밑바탕이며, 이를 위해 관료주의 장벽을 낮추고, 상대국가에서 실시한 제품·공정·서비스의 적합성 평가 결과 및 절차를 자국에서 실시한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이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아세안의 기본 협정을 현실화해 가야 한다. 아세안은 가입국들의 잠재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기술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 일환으로 학계·연구기관·개인 각 차원에서 파트너십을 수

립하고 과학 학술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인적 자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회문화공동체는 동남아 국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수준을 현대인의 글로벌 표준에 맞추는데 그 지향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 간 접촉은 경제 및 정치 분야에서 협력을 증대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 간 접촉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도 갖는다. 개인 간 접촉은 개인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협력 기구들을 활성화하며, 동남아 국가 및 사회가 공통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려는 아세안 프로젝트들을 현실화하는데 실제로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 간 접촉은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의 각 구성원들에게 교육과 직업개발 기회를 포함해 평등한 '소셜 엘리베이터'(social elevator) 탑승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아세안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동남아 역내의 물리적, 조직적 상호협력과 개인 간 상호관계를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세안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일반 계획은 구체적 방향과 방법을 규정하고 이것들을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각종 지수의 혁신, 국가 통치, 개인 간 접촉' 등과 같은 중간 범주의 목표로 분류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간 범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언어 장벽 해소, 역내 접근성 향상, 숙련노동자 상호인정협정, 관광 분야 개발, 장학금 지급과 비자 지원을 포함한 학술교류지원 등의 프로그램들이 현실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포괄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자

면, 아세안은 개인 간 접촉 활성화를 그 자체로 하나의 목표로, 그리고 다자간 대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통로이자 수단으로써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이 실제 현실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 국민들이 개인 간 접촉을 사회적, 공식적으로 지지하는지에 대해 꼼꼼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 할지라도 법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이민노동자들을 합법적 영역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및 노동력 이동을 비롯한 몇몇 분야에서는 아세안 '10개국'이 실제로 협력하고 있다.

## 기본 계획안과 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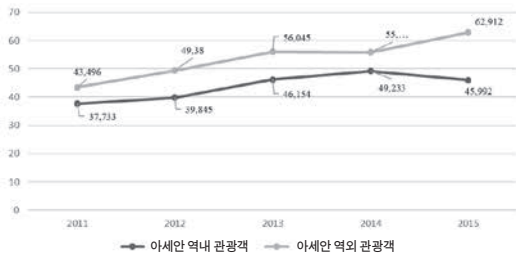
개인 간 접촉을 우선적 실행요소 중 하나로 설정한, 아세안 상호관계 증진을 위한 일반계획은 2025년까지 동남아의 노동력 이동을 확대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통합된 교육 공간을 창출하자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한 아세안의 노력은 통일된 완전체로서 아세안의 경쟁력과 그 구성 국가들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과거부터 동남아 휴양지들은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었다. 현재 동남아의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산업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동남아 역내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외 관광객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분야의 경기(景氣)를 장기적 호황으로 끌어가기 위해 아세안은 꼭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동남아 국가의 국민들이 역내 다른 나라로 입국하는

그림 1. 아세안 국가 관광객 수

(단위:천 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세안상호비자면제협정’(the ASEAN Framework Agreement for Visa Exemption)이 현실화 단계에 있다. 호텔, 식품 산업, 휴양 및 레크리에이션, 오락 분야 서비스 등이 상호 수요를 자극하면서 ‘증폭기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세안 가입국들은 휴양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관광산업과 함께, 아세안은 노동력 이동간소화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10개국’ 중 어느 나라에서 숙련노동자가 부족하고, 어느 나라에서 노동의 수요-공급 사이에 불균형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조정·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인력수입국과 인력수출국 사이에 숙련노동자 이동 절차를 일원화하고 직업훈련과 숙련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노동력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배경으로 아세안의 직업 관련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체결을 꼽을 수 있다. 상호인정협정은 엔지니어 용역, 건축 용역, 전문 영역을 포함해 의료 서비스(치과 개업의 등), 회계 업무, 관광산업 등과 같은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로그램 보안 개발, 네트

워크와 시스템 관리, 정보 보안, 건설 및 IT 관리 등의 영역에서 ‘아세안 정보통신 기술 표준 체계’(ASE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kills Standards)가 확립되고 있다.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동남아국가 국민들에게 이전보다 더 많이 주어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와 아시아개발은행가 주도해 ‘10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할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전반적으로 아세안에서 개인 간 교류 활성화는 달성해야 할 중요 목표 중 하나이다. 또한 아세안이 설정하고 있는 미래 계획을 현실화하는 핵심통로이기도 하다. 개인 간 교류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 아세안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공을 거두리라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호인정협정에 포함된 노동자 수는 전체 노동자 수의 1.5%에 불과하며, 이주노동자들의 87%는 비숙련 노동에 종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관점에서 보면 ‘회색 지대’에 놓여 있다.

### 대학과 학술 교류

동남아국가의 많은 대학이 각자 고유한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여건, 그리고 교육 환경을 갖고 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전통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은 고등교육의 향방을 자국의 이익이나 민족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려 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고등교육 기관들은 아세안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아세안 역내 대학 상호교류 및 대학연계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아세안 최고 대학들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면서 동남아를 통일된 교육공간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10개'국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고르고 균형 있게 조정하도록 해줄 것이고, 국제관계를 이끌어가는 능동적 주체로서 아세안의 경쟁력을 보증해 줄 것이다.

연구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는 것 외에도 전문 인력, 다시 말해서 아세안 역내에서 우수 학생과 교수들의 이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문화적 다양성이 자리 잡을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특히 아세안 역내에서 숙련노동자들이 활발하게 이동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의 첨예한 실업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고, 각국은 자국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보다 선명하게 그리게 될 것이다.

아세안 역내에서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 학생들의 선택에서 지역 고등교육기관은 항상 뒷전이다. 아세안 역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대학진학률(Growth Tertiary Enrolment Ratio)은 평균 27.3%에서 36.1%로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였을 뿐이다.

잘 사는 집안에서 자란 동남아지역 학생 대다수는 역외에서 교육을 받고자 한다. 그 결과 동남아 대학들은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의 고등교육기관들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려고 있으며, 최고의 교육과 교육시스템을 수용해 자국의 위상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

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대학들이 미국, 호주, 일본, 영국, 캐나다, 이렇게 5개국 고등교육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아세안 가입국 간 교육협력 기본원칙으로 아세안 대학네트워크(ASEAN University Network)와 교육의 질을 감독하는 아세안 역량 기본시스템(ASEAN Quality Assurance Framework)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아세안 대학네트워크는, 동남아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아세안 역내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경우 컨설팅 지원을 해주는 등 나름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 역량 기본시스템은 아세안 역내 고등교육의 커리큘럼을 통일하고, 학생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 내 학생들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필리핀 대학생의 약 80%는 사립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경우 73개 대학 가운데 53개 대학이 사립이고, 20개 대학만이 국립이다.

아세안은 학제적 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여러 영역에서 일할 수 있고 성격이 상이한 여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한다. 이에 맞춰 혁신적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자기개발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전문 분야를 최대한 다각화할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 바로 이점이 중요하다.

아세안 공동체라는 기치 아래 여러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한 결과로 다양한 상황들

과 조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교육혁신프로그램을 자국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세안의 다른 국가들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아시아 경영대학,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압둘라자크 대학교 등을 혁신선도대학으로 꼽을 수 있겠다. 이들 대학에는 순수학문과 실제업무를 결합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외국교수와 역내 고위 관료 출신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다.

학술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동남아를 기반으로 통일된 완전체를 나아가려는 아세안 국가들에는 가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다. 동남아의 특성이나 동남아 국가들이 직면한 과제, 그리고 아세안의 미래 청사진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통일된 교육시스템으로 나아가갈 것이다.

## 결론

아세안의 기치 아래 다방면에 걸쳐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력은 ‘얕은 통합’(Shallow integr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동남아 10개국은 서로 너무 달라서, 흔히 경제통합의 고전적 의미로 일컬어지는 자유무역지대, 경제·화폐 통합이라는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은 일정 부분 타

당하다. 적어도 현재의 세계경제와 정치 기류를 볼 때 그런 인상이 짙다.

하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얕은 통합’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외 투자 및 거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동남아가 비즈니스 통일지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비즈니스 통일지대로의 전환은 아세안이 통일된 완전체로서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는 자극이 될 것이다). 또한 정치, 과학, 경제, 동남아국가의 지역자치발전, 아세안의 정체성 강화 등 여러 핵심 분야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리더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통합으로 가기 위한 방향 설정, 과제 수립, 수행 전략 등을 이해하고 있으며, 미래 통합의 청사진을 현실에 구현할 수 있도록 실효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방안으로서 동남아 지역의 최대 과제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소수 엘리트의 결합이 아니라, 동남아 10개국 국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개인 간 교류의 역할과 기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 간 교류 활성화가-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현 단계 세계화가 보여주는 핵심적 특징 중 하나인 ‘제3의 언변들링’이라는 도전에 아세안이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바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번역 :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예브게니 카나예프(E.A. Kanaev) 역사학 박사,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원제 : АСЕАН И ПРОБЛЕМА «ТРЕТЬЕГО РАЗЪЕДИНЕНИЯ»: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 출처 : IMEMO 발표논문(2018.09.03)



---

# 서구 경제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과 '동방으로의 전환' 전략

---

비탈리 슈빅코

---

2018년 여름, 러시아의 개인과 법인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전 보다 양적으로 좀 더 확대되고 질적으로 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했다. 2018년 6월, 미국 측 입장에 따라 러시아 특수기관과 연관돼 있다고 한 후 이 기업들의 사업파트너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8월에는 두 개의 러시아 기업과 기업소속 법무대리인이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그리고 1991년 제정된 미국의 '생화학무기 통제 및 생화학전 철폐법'(PL-102-182)에 준하여 제재의 제1단계를 8월 27일부터 러시아에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영국에서 화학무기를 사용(스크리팔 사건)한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결과이다. 이런 제재들은 '국가안보' 분야로 분류하여 미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기와 기술(정보 보안시스템과 관련 기기, 에어가스 터빈엔진, 전자기구, 집적회로, 항공전자공학 등)이, 만약 이 기기와 기술의 최

종 사용자가 러시아 국가기관이거나 러시아 기업일 경우, 러시아에 수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11월에 제재의 제2단계가 발효되면, 그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미 국무부가 결정할 것이다. 그 외에도 국가기관이나 기업뿐 아니라 그 소유주(소유주 및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는 자)가 러시아 지도부와 가깝거나 러시아 대외정책에 참여한다고 인정될 경우, 그런 러시아 개인 기업과의 상호관계를 폭넓게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다.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앞으로 있을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이 매우 모호하며, 따라서 제재는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채택된 제재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러시아 경제에 그 제재들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미약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예정된 거래가 결렬되거나 법적 규제나 금지 때문에 상당한 물질

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도 없다. 러시아 기업이 제재 때문에 대규모 손해를 본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루살 사이다. 루살 사의 소유주인 올레그 데리파스키에 대해 미국이 취한 제재의 결과로 시장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판매 전략과 회사의 경영구조를 포함한 관리 체제에 전반으로 대대적 변화가 수반되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워싱턴의 관점에서) 대외 정책이라는 이유로 모스크바를 ‘처벌’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조치들이 현 러시아 경제에 실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무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서구 자본과 기술이 러시아에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러시아를 견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 러시아 경제는 성장을 저해하는 많은 자체 요인들을 갖고 있으며, 서방의 제재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둘째, 러시아 지도부는 경제적 목표들보다도 러시아의 대외 정치적 목표들(세계 및 지역 정책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대한 반작용)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서구의 제재가 러시아의 경제발전 과정에 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경제 전략의 측면에서 수입대체 방안을 여러 루트를 통해 확보하는 등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경제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그리고 외국, 특히 러시아가 서구의 투자와 기술을 핵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 결과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 가해진 제재에 대해 러시아 정부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첫째, 러시아 지도부와 정치권은 제재가 정치적 수단이며 러시아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결과를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 도구로서 제재는 러시아 수출입 현황에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도 없고, 주요 물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으며, 러시아 국내 경제상황을 불안정하게 몰아갈 수도 없다. 러시아 경제의 측면에서 보면,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는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과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

둘째, 미국과 미 동맹국이 발의한 법안이나 규칙 등을 러시아가 따르지 않자 미국이 이에 대해 적대감을 표현했는데, 러시아 정부는 그 결과물이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라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제재는 러시아 지도부의 정치 행위에 형식적 차원에서만 언급될 뿐이며, 제재 해제 조건 역시 그저 형식적인 성격에 불과하고, 제재를 제안한 사람들 역시 제재가 어떤 실효성도 갖지 못함을 알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지도부는 대외정책을 결정할 때 서구 제재를 고려할 필요도 없고, 나아가 러시아 지도부가 이를 고려할 가능성도 없다.

셋째,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서 과거 소련에 속했던 국가들이 어떤 군사·정치적 위상을 가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와 서구의 피할 수 없는 경쟁의 결과로 간주한다. 러시아 지도부는 러시아와 서구가 벌이고 있는 이 경쟁의 결말이 러시아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이며, 향후 몇 십 년 동안 국

제관계에서 러시아의 위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옛 소련에 속한 국가들이 서구의 군사정치 동맹에 가입하거나 그 틀 안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정치적 역할이나 영토 수호의 측면에서 대단히 위협적 요소가 된다. 러시아는 소연방을 구성했던 국가들에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수반되는 대(對)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에게는 본질적이지도 않고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넷째,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서구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서구가 기존의 제재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서구가 세계정치 체제에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중심으로서의 러시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심으로서의 러시아란, 슈퍼파워 또는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논리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의 이익을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철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러시아를 말한다. 이러한 테제는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대부분의 고위관료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공유되고 있으며, 향후 있을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공식문건 속에서도 그대로 투영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 제재와 그 직접적 결과들을 러시아 지도부와 대내외 정책 분야 관료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재의 배경이 러시아의 어떤 구체적인 정책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 성격이 짙다고 간주하면서도 러시아 정부는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제재 수단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러시아 정부가 수동적으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향후 있을 개연성 높은 제재를 미연에 주도적으로 예방하고 준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취한 방법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었는지 굳이 따져보지 않아도, 제재가 현실화될 경우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기본방침, 다시 말해서 미국과 서구의 국가기관들이 이미 발표했거나 향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재들로 인해 러시아의 국가안보가 심각한 손실이나 피해에 직면할 경우, 이를 미연에 막기 위해 러시아가 취할 기본 방침을 살펴볼 수 있다.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1. 국가안보와 직결된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제품의 원자재나 부품을 미국과 유럽연합에 의존할 경우, 그 의존도를 대폭 축소한다.
2. 우선적으로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미국 기업이 출시한 프로그램 사용을 제한한다.
3. 국가 핵심기업이 미국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이용해 대금을 지불할 경우, 미국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춘다.
4. 특별 국가은행을 통해 국방, 안보, 보건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신용장을 발급하고 대금을 지불할 경우, 서구의 제재가 강화되면, 해당 은행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자원을 해당 은행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5. 국제 대금 지불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연인의 신용지불시스템을 수립한다.
6. 국제발행과 관련해 외국 경제주체들의 자본이 유입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 국가에

산 운영과 독립, 그리고 안정을 확보한다.

7. 미국이 제재조치를 취하면서 러시아의 채무변제능력이 감소하고, 미 국채가 줄어들 위험성에 대비해 러시아 정부는 중앙은행의 금본위 지불준비금의 구조를 변경한다.
8. 미 정부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국제금융기구가 강력한 자금력을 이용해 러시아 국내 경제상황에 개입할 경우, 러시아의 재정은 국제금융기구에 의존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프로젝트 수행 시 재정의존성을 근절하거나 최대한 제한한다.
9. 러시아 자연인과 법인이 서구에 투자한 경우,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호혜적인 여건을 마련한다.

위에 열거한 여러 방향 중 외국자본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의 독립을 확보하는 것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사항은 아직 논의단계이거나 확정단계(실행이 아닌)에 있다. 앞서 서술한 러시아의 준비 태세에 대해, 미국 국가기관의 발의나 승인 아래,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몇몇 국가들은 러시아 자본을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위의 기본방침에 의거해 취해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 인프라, 특히 은행 관련 인프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서구 금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 이것은 제재가 앞으로 더 강화될 경우 러시아 국내은행과 지불시스템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 관료들의 의견에서 보듯이, 그것은 기업과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여

론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구의 제재에 적응하고, 제재가 이후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나타날 난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러시아 정부는 각 경제주체들에게 미국의 영향이 적거나 미약한 나라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국제관계를 재조정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언이 현실에서 실제로 실현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커다란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인도뿐이기 때문이며, 중국과 인도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러시아에 커다란 정치적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및 인도와의 무역·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역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가 확대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의 성격으로는 중국 및 인도와 러시아의 관계가 그리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유럽-대서양과의 경제적 상관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중국과 인도를 제외한 기타 나머지 국가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의 압박에 취약하므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본유입 상대국으로는 솔직히 러시아에 매력 없다. 따라서 '동방으로 러시아의 전환'이라는 전망은 서구의 적대관계 체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러시아 지도부 앞에는 양자택일이라는 현실적 갈림길이 놓여 있다. 첫째,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 자체가 축소되는, 더 고립적인 폐쇄경제체제의 재진입, 둘째, 적극적 대외정책의 기초를 철회해 서구와의 경제관계를

원상태로 회복하려는 노력 등이다. 물론, 두 번째 대안이 더 쉽고 간단하게 현실화될 수 있으며, 경제적 불안 위험요인이 더 적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최고정치지도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것이다. 앞서 언급한 행동방침 중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장기 목

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라 수반되는 현실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비탈리 슈빗코(V.G. Shvydko) IMEMO 일본연구센터 소장
- 원제 : Реакция России на запад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анкций и стратегия «разворота на Восток»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08.30)

# 新 지구전(持久戰)을 논함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이번 여름, 미중 간 벌어진 무역전쟁의 짧은 숨고르기가 끝났다. 새로 첫발을 내딛은 나라는 8월 23일부터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미국이었다. 중국 역시 같은 날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일부 서방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확 계산을 근거로 이 대결의 승자는 미국이 될 것이라 예견했다. 미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중국은 미국산 상품을 1,300억 달러어치 수입했고,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0억 달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데, 그럴 경우 중국이 미국에게 동일한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미 수입 규모가 몇 배나 적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결에 대한 대가가 너무나 커져서 경쟁 상대인 미국에게 동일한 손해를 가하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게 됐다. 먼저 중국 정

부는 미국의 조치를 견뎌낼 능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이 하락하지 않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보호관세는 내수와 미국 상품에 대한 대체재를 다른 국가에서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도입됐다. 콩과 견과류, 과일, 육류를 포함해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 7월에 부과한 25% 규모의 관세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면서, 동시에 미국 농가들에게도 아픈 시련을 안겨주었다. 무역 전쟁이 수 년 동안 이어진다면, 십중팔구 미국은 중국 시장에 몇 억 톤의 콩을 공급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다른 공급업자들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다.

중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미국의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신규 관세는 5%를 상회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했던 것은 미국산 LNG에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결정이었다. 트럼프가 중국산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포기한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LNG 수입량을 증대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수입 증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종결된 것이었다. 원래 미국과 합의하려는 중국의 의도는 급격히 커진 무역 적자로 인한 미국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미국산 LNG는 저렴하지 않지만, 중국 시장에서 쓸모가 있을 것이다. 관세 도입 이후 알래스카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LNG의 공급은 실현 불가능해졌고, 이는 오히려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공급국들에 추가적인 기회를 열어준다.

## 패권 투쟁

미중 협상이 결렬된 분명한 이유는 양측 간 추구하는 지향점의 차이에 있다. 무역 불균형에 대해 미국이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이야기는 수입 증대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중국을 설득했다. 물론 중국은 무엇보다도 첨단기술 상품의 구입을 늘리고 싶어했지만, 미국산 자원과 농산물 또한 나름의 소비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무역 불균형 문제는 둘째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문제는 미국이 '미국산 지적 재산 및 기술 획득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과의 전쟁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의 경제발전을 멈추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해를 끼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트럼프의 전쟁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별로 필요하지는 않은 미국산 상품에는 돈을 더 쓸 용의도 있으나, 중국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야망

과 첨단 기술 부문에서 세계적인 패권을 획득하려는 목표를 포기하는 일이다. 미국의 제재는 2015년 시진핑 정권 하에서 제안된 '메이드인차이나 2025' 프로그램의 실패를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10년 동안 중국을 로봇공학, IT, 육상 교통, 항공, 신재생 에너지 등 10개 분야의 첨단 기술면에서 세계 리더국가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중국이 경제 모델을 변경하고, 첨단 기술 획득에 대한 요구를 포기했으면 한다. 미국의 압박으로 중국 언론은 '메이드인차이나 2025'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 빈도를 줄였으나, 이것이 중국이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중국 당국이 프로그램을 더욱 강력하게 실현하려고 할 것이라 확신할 수 있다.

무역 전쟁의 현 단계에서 중국의 목표는 미국에게 동일한 경제적 손해를 입히자는 것이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제재 압박 하에서 경제성장률을 연간 6.5-7%대로 유지하고, 향후 10년간 과학·기술 분야의 패권을 쥐는 것이다.

## 중국, 현기증과 작별하다

트럼프는 놀랍도록 빠르게 승리에 대한 중국 정치 및 인텔리 엘리트의 지나친 자신감을 '치료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예시는 2012년 이후 시진핑 통치 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궈진 성공에 대한 다큐멘터리 'Amazing China(厉害了,我的國)'의 운명이 될 수 있겠다. 2018년 봄에 이 다큐멘터리는 널리 선전됐으나, 미국의 전자 부품 공급 거부로 인해 파산 위기에 놓인 중국 기업 ZTE의 떠들썩한 사건 이후, 이 다큐멘터리는 TV 편성표에서 슬그머니 사라지고

영화관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중국이 상상하는 과학·기술 국력과 현실 간 대비가 너무나도 극명했던 것이었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자기평가로의 귀환이 세계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패배 인정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중국 엘리트층에서는 외국인들을 헛되이 자극하거나 겁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숨기라’는 덩샤오핑의 유언으로 돌아가자는 요구가 생겨났다. 비판의 물결은 중국이 일련의 주요 부문에서 이미 미국을 넘어섰다고 주장한 중국학자들을 덮쳤다. 미국의 제재가 있기 전까지 중국 사회는 낙관적인 평가와 전망을 기쁘게 받아드렸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러한 평가나 전망에서 중국 정부를 혼란에 빠트리려는 노골적인 시도가 아니라면, 명백한 딜레탕티즘의 발현을 본다.

중국 선전에 등장하는 승리주의가 미국의 제재 정책 강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현안이며, 논쟁의 여지가 있다. 시진핑 통치 하에 전개된 인민들 사이의 ‘4대 자신감’ 즉 중국 특색 발전 방안과 정치 질서, 사회 이론, 민족 문화에 대한 자신감 강화 선전은 중국의 경제 잠재력을 과대평가한 것에 대한 정계 내부의 자성의 소리를 불러일으켰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 중국의 정보 공간은 다른 이들의 성공에 대한 무의미한 ‘과시’와 ‘오만함’으로부터 정화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강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민간 부문에서 과학·기술 발전 분야의 정보 폐쇄성을 심화하는 것이 그 결과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외국인들의 우려는 줄어들 것인데, 그 이유는 이들의 아는 것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봄에 중국 엘리트가 겪은 ‘진실의 순간’을 트럼프의 승리로 고려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중국에 해를 가하기 위해서 경쟁국들은 ‘성공으로 인한 현기증’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중국의 정책 목표는 우선순위 분야에 자원을 집중시키고 미국의 보복에 따라 위협에 처한 기업 및 분야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당제 중앙집권시스템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 미국의 ‘관대함’ 기대하지 말아야

중국 언론은 패닉을 심화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국가 경제에 대한 미국 제재의 부정적 영향력을 폭넓게 논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전반적으로 그 여파는 분명하다. 중국 정부는 2013~2014년에 설정된 비효율 기업 수 감소 및 경제 발전에서의 시장 요인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실패할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 당국은 대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둔화의 늪에서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수출 업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될 것이고,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자금 투입 규모가 늘어날 것이다.

미국과의 경제 갈등을 풀어내기 위한 중국의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8년 8월 10일 ‘인민일보’에 게재된 ‘미국이 도발한 무역 전쟁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사설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무역 전쟁 초기에 수많은 출간물에서 그랬던 것처럼, 주된 비판의 대상은 미국 행정부가 아니라, ‘중국의 정책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고 과장됐으



며, 이것이 미국의 총체적 공격으로 이어졌다'는 중국 인터넷 상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 일찍 합의에 나서 양보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무역 전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며 보복책으로 대응하지 말자고 촉구한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중국이 나약함을 보인다면, 미국은 반드시 '관대함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무역 전쟁은 끝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화가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의 주요 근거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강력한 경쟁국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냉전' 시절에 소련을 무너뜨렸고, 미국이 일본에게 강요한 '플라자 합의'는 엔화 절상과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졌다. 이제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는 중국이다. 중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 미국은 뒤쳐지지 않기 위해 자국 경제를 부양하고, 경쟁국 억제에 호소함과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위대함'이라는 선전을 통해 이러한 노선에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는 '중국은 미국의 변화를 초래할 의도가 없고, 또한 미국을 중국으로 대체할 의향도 없다. 미국은 중국을 복속시킬 수 없고, 더욱이 중국의 발전에 제동을 걸 수 없다. 비바람이 없었다면, 누가 무지개를 볼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쉽사리, 단순하게, 징과 북소리에 맞춰 실현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중국의 모든 아들, 딸들의 의지가 진정한 요새가 될 때만, 그 누구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 군대는 지휘관이 필요하다

미국과 무역전쟁이 시진핑의 인기 하락과 그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이어질 것인가?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대결에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데 일부 책임질 수는 있지만, 대외 위협을 목전에 둔 동원 효과는 당·국가 지도자를 중심으로 중국 사회를 한데 뭉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트럼프의 정책 덕분에 권력 집중화와 개인화라는 시진핑의 노선은 더욱 정당화됐다. 중국은 강력한 경쟁국과의 대결에서 자국이 패배하지 않기 위해 '경제 총사령관'이 필요하다. 물론, 현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시진핑뿐이다.

중국 당국의 대미 정책을 둘러싸고 중국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비판적 언급은 발언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중국 개혁이 실시된 지난 40년 간 미중 간 경제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해왔다. 미국이 주도하는 발 빠른 보여주기식 단절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무역은 단시간에 양국 관계의 안정장치 역할을 상실했고, 더욱이 경제 갈등과 그로 야기한 증대된 긴장관계는 다른 분야로 옮겨질 위험도 있다.

중국은 항복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조속하게 호혜적 합의를 달성하는 것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중국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빠른, 그리고 확실한 승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중국의 수정 헌법 덕분에 시진핑은 2028년까지 권력을 쥘 수 있다. 그는 미국과의 장기적 소모전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시스템은 외부의 적에 직면해 인민들을 통합할 수 있고, 이러한 소모전을 견딜 능력을 갖

추고 있다. 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의 유명한 연설 '지구전을 논함(1938)'을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원제 : О новой затяжной войне
- 출처 : 러시아국제문제협의회(PCMД/RIAC) 논평(2018.8.14)

---

# 중국 : 새로운 발전 단계

---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시진핑의 개인 권력을 질적으로 강화시킨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와(2017년 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2018년 3월) 이후 중국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다.

이 발전 단계의 특징은 이전과는 다른 경제와 정치 간 상관관계이다. 중국은 지난 10~15년간 민주화 문제를 사회 전체가 아닌, 당내 민주주의 차원에서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경제 및 정치 개혁의 조화라는 주제를 주로 논의해왔는데, 이제 상황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연구와 시진핑의 격상을 목표로 하는 당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활성화했으며(중국 공산당 지방위원회의 시진핑 사상 주1회 필수 연구), 단순한 어록 과잉학습이라는 마오쩌둥 시대의 옛 성격을 얻게 됐다. 이와 동시에 중국학자들과 교수들, 전문가들은 검열과 (무엇보다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다른 사상을 가진 이들에 대한 색출이 강화되고 있고,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

가 사실상 완전히 중단됐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당국은 경각심을 높여 6월 4일에 대비했다(1989년 톈안먼 사태 추모일). 2019년 사건 30주기를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분석가들은 비공식 발표를 통해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실현은 되고 있는 시진핑의 경제적 자유 확대와 (역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이전 시절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자유 탄압 간에 새로운 전략적 모순이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한다. 동시에 다수의 전문가들은 아직 긍정적인 경제 및 사회 동향이 유지되고 있고, 그 무엇도 시진핑의 권력 및 권위 독점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 그러나 문제는 단기적 차원이 아닌, 중장기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 경제 상황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세계은행은 이를 반영해 2018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4%에서 6.5%로 상향 조정했다. 비효율적인 공공부문 개혁,

국영기업 및 지방정부 부채, 경제 안정이라는 명목 하에 외환 및 증권 시장의 완전한 자유화 과정 지체 등의 경제문제는 여전히 고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심각하지 않다.

2018년 중반 무렵 시진핑의 권위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은 외부로부터, 즉 미국 측으로부터 가해졌다. 중국 정부는 2017년 대미 정상외교에서 거둔 성과를 당 및 국가 내부 차원에서 시진핑의 권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카드로 선전했다. 그러나 일련의 중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가 2017년 말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당대회 직후 시작해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후 강화한 소위 ‘무역 전쟁’은 시진핑 개인에게 가장 강력한 타격을 입혔다. 시진핑은 미국이 그같이 가혹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당과 중국 사회에 대미 관계가 악화된 이유를 적절히 해명하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체면을 잃었고,’ 이는 미국의 정책과 트럼프 자체에 대한 시진핑의 개인적 분노를 야기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도, 중국의 세계 정치 리더국으로의 변모를 지향하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있어서도 대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계 단절에 나설 용의가 없다. 여기에서 미국의 무역 공격에 대한 시진핑의 이중적 반응이 나타난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책을 취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타협점을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의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중국은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대

한 미국의 25% 관세 도입에 대해 일부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보복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은 자동차, 자동차 부품과 같이 미국의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대중 교역에서 미국의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상품 수입 규모를 축소시키지 않거나, 오히려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했다(이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농업주 내 트럼프의 이미지를 위해 특히 중요하다).

2018년 7월 1일 중국은 가전제품, 식음료, 화장품 및 의약품 등을 포함한 1,449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평균 15.7%에서 6.9%로 인하했다.

중국은 이와 동시에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립 차원에서 EU에도 유리한 EU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EU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시진핑은 대외정치 측면에서 보여주듯 대러 관계,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상하이협력기구(SCO)와의 관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6월에 칭다오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이에 수반한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통상적인 요소 외에도 전 세계에 G7 포맷에 대한 대안이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보여줘야 했다. 시진핑은 정상회담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가입한 SCO는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테러리즘 척결을 중심으로 하는 역내 안보 문제 해결 부문에서 예전보다 훨씬 큰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집중 조명했다.

동시에 중국은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그리고 북미 회담 차 김정은이 싱가포르를 방문하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

하는 조치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에서 여전히 '주요 플레이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해제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그러나 2018년 중반, 중국의 대응책은 강력해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대중 무역 압박에 군사·정치적 압박을 추가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남중국해 군사화를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의 행위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이거나, 국제 해상 군사훈련인 환태평양 합동연습(RIMPAC, 림팩)에 대해 중국의 참여를 금지하고, 대만에 대한 무기 공급 증가 계획을 통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2018년 하반기에는 중국의 발전 벡터 및 국제 사회에서의 행동이 더욱 다양한 방향성을 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는 고질적인 문제가 유지되기는 하지만 심화되지는 않는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동향을 지속해서 보일 것이다. 정치·이데올로기 부문에서는 시진핑에 대한 새로운 숭배에 대해 인텔리 엘리트들의 불만이 크게 증가될 것이나, 시진핑의 권력 독점에 대한 전략적 위협은 없을 것이다. 관세와 지적 재산, 무역 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타협안 모색의 결과로 미중 간 무역 대립

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시진핑의 '개인 외교'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이를 통해 트럼프와의 직접 접촉에 나서 일종의 타협을 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의 '구겨진 체면' 요인과 이와 더불어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 긴장 심화로 인해 미중 관계는 2018년 말까지는 2017년 1~10월의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보여주기식 대러 관계 강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은 러시아 단독이 아닌, '러시아+SCO' 포맷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새로운 뉘앙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이전과는 다르게 SCO의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대러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이 아닌,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대립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활용하게 될 러시아의 잠재력에 기반하는 기구로서의 SCO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 Китай: новый этап развития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7.3)

# 아태지역과 러시아

알렉산드르 포도롭스키

세계화 과정의 위기로 인해 아태국가들은 지역 차원에서 경제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역내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리더국가들이 역내 통합 전략에 대해 아직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아무런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필요한 경쟁력(국제 결제에서 자국 화폐의 역할, 여신·금융 서비스 품질, 과학·기술 잠재력 등)과 완벽한 리더십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편 오늘날 미국은 자국의 경쟁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선화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유는 미중 관계가 이따금 경제 전쟁으로 치닫는 등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아태국가들의 전략은 다면적 성격을 띤다. 그 중 1순위는 양자 협정과 구체적인 프로젝트다. 두 번째는 주로 소(小) 지역적 의미를 갖는 다자간 조약이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면 TPP11이나 아태자유무역지대와 같이) 거대

지역적 성격을 띤 프로젝트가 있다.

구조적으로 조직된 포맷(연합이나 기구처럼 명문화된 참가국들의 수와 의무를 가짐) 차원에서의 대규모 프로젝트 실현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양자 간 차원이나, 혹은 참가국들에 대한 엄격한 정치·조직적 틀 및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개방형 프로그램 및 전략 차원에서 역내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는 국가로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양자 협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과 중국 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세계 교통 인프라의 현대화를 지향하는 '일대일로'의 중국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북방경제'(중국, 북한, 러시아, EAEU/EEU와의 관계)와 정책 협력방안인 동아시아철도공동체(미국 포함) 구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태국가들과 관계발전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이나 일본의 인도양 및 아프리카 진출 전략도 마찬가지로 검토해볼 수 있다. 이러한 이

니셔티브들은 우선순위가 결코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경제 관련 내용은 하나같이 각국의 전략적 과제 해결에 집중돼 있다. 여기서 러시아는 자국의 역량과 자신이 제안하는 파트너십의 파라미터를 제시하면서 주도적인 제안을 통해 입장을 설정해야 한다.

(1) 새로운 현실 속에서 러시아는 ‘파트너십 강화 정책(Policy of Focused Partnerships)’이라고 조건부로 명명할 수 있는 장기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파트너십은 러시아 기업들의 활동을 구체적 프로젝트와 아태지역 역내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협력에 집중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가 아태 국가들이 제안한 다양한 전략과 이해관계와의 접점을 찾고, 러시아의 대외경제 관계를 아태지역 경제의 현실에 최대한 적절하게 조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실제로 어떤 일국이 제안한 역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역내 다수 국가들이 제안한 일련의 프로그램을 실현하는데 파트너국가가 될 수 있다. 관세, 투자 및 비즈니스 규정 등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지지 않고서도 말이다.

(2) 이러한 정책은 역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한다. 향후 10~15년 사이 아태지역의 중산층 규모는 수 억 명에 이를 수 있다. 중산층이야말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현대적이고 안전한 교통 시스템, 첨단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해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다.

(3) 러시아는 역내 경제공간에 아직 활발하게 진출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포함해 민관(民官)의 조율된 행동을 통해 이러한 수요를 보장할 수 있다.

(4) 오늘날 대외 문화정책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요인은 문화상품 수출의 상업적 성과 증대라는 측면에서도, 러시아의 이미지에 대한 긍정적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 인식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한국의 K-pop(한류) 정책이 보여준 성과로 입증된다. 한류는 한국이 아태국가로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국의 사례가 보여 주듯, 문화와 비즈니스는 국내외적으로 상호 보완적 성격을 띤다. 중국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시도한다. 러시아는 거대한 다문화적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최근 러시아 극동지방에서는 유럽 러시아의 대규모 문화 센터와 관련한 문화 인프라가 발전하고 있거나, 혹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인프라는 역내 문화 공간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다.

(5) 이 때 염두에 뒤야 할 점은, 대부분의 경우 러시아와 역내 국가들이 함께 노력을 기울여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일련의 아태국가들(이를테면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러시아에서 증가하는 양질의 교육 및 보건에 대한 수요는 거대한 아태지역 차원에서 충족될 수밖에 없고, 이는 원격 교육, 원격 의료 진단, 현대적 의약품 및 의

료 기기 등에 대한 공동의 해결책을 요구한다.

(6) 교통/물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북극항로를 포함해 교통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러시아가 참여하는 문제와, 러시아가 갖추고 있는 (무엇보다도 항공 산업에서의) 교통수단의 생산 잠재력은 아태국가들과 협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러시아는 한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것이 자국에 이득이 될 수 있다.

(7) 중산층 요인의 영향력은 에너지 부문과 같은 전통적 분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도 반영된다. 전력 수요에 '스마트 하우스' 구상 차원의 소위 '스마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추가된다. 아태지역에서는 국제협력 차원 등에서 여러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시범 프로젝트가 실현되고 있다. 이에 동참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의미가 있다. 우주 프로그램, 대륙붕 지역의 생물 및 광물 자원 개발 프로그램, 아태 국가들이 채택한 디지털 경제발전 프로그램과 민관학(民官學) 혁신 협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8) 역내 중산층이 급속히 성장함으로써 러시아 시장에서 관광 서비스에 대한 대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로는 역사 유적지 견학 목적의 관광, 교육 관광, 의료 관광, 스포츠 관광(사냥과 낚시 포함), 축제 관광, 익스트림 투어리즘 등이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중소기업에 추가적으로 상업적 틈새시장을 열어준다.

아태지역 역내 포럼에서의 정치적 대화는 모

두를 만족시키는 역내 안보시스템의 제도적, 법적 기반을 통해 완성될 수 있는데, 아직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

오늘날 국가 간 갈등 위협도 다면적인 성격을 띤다. 이러한 갈등 위협으로는 남중국해 상황을 포함해 역내 영토 분쟁의 지속, 북한의 내부 변화에 대한 빛나간 예측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실행이 야기한 한반도 내 군사·정치적 상황의 혼란 리스크 등이 있다. 또한 종종 악화되는 양안 문제(타이완 해협)도 있고,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 위협과 중동에서 타격을 입고 아태지역으로 이동하는 극단주의 단체들의 위협 또한 빠트릴 수 없다. 이러한 단체들이 이동하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중국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리스크, 환경오염 심화와 전염병 리스크 등도 있다.

역내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보호무역주의 관련한 결정들은 경제 안보 부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항행의 자유와 에너지안보 보장 문제도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편 역내 안보시스템은 여전히 단편적이고 노후화돼 있다. 이 때문에 '냉전' 시절부터 지속돼 온 미일, 한미 군사동맹의 현대화가 어려워 보인다. 일본에서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토 분쟁에서 파트너인 미국이 일본을 지지할 역량이 있는지, 그럴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한국은 북한 및 중국(또한 러시아)과의 관계에서 유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한미일 3자 군사·정치동맹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점화한 일본의 인도·태평양(Indo-



Pacific) 구상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의 긴밀한 협력을 골자로 하며, 중국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한다. 이 구상에 대해 중국은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아세안 국가들 역시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역내 안보 위협의 다면성은 러시아가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로 귀결된다.

- (1)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 당사국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상황을 극복해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이와 관련해서 파트너국들과의 회담을 통해 '5개국(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대표들이 참가하는 협의 메카니즘을 구축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합당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는 협의 가능성의 파라미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자국의 국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 (2) 아태지역에서 이슬람 테러리즘의 확산 위협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 러시아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이때 논의 포맷으로는 SCO, 동아시아정상회의, 러시아-아세안 포맷 등이 가능하고, 러미 안보대화가 가동된다면 러미 안보대화 노선을 통해서도 선제 조치를 위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 (3) 인도-태평양 독트린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아태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독트린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객관적으로 설정된다. 공식적으로 러시아는 인도의 대태평양 정책 활성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반대로 인

도에 대한 아태국가들의 관심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는 아세안 회원국들을 포함해 일련의 역내 국가들이 자국의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상황에서 증대하는 중국의 군사·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독주에 대한 균형추로서 인도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러시아는 이 독트린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인식 속에 내재돼 있는 반중국 요인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태롭게 하거나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상호 모순적인 두 가지 벡터가 충돌한다. 인도의 입지가 확대되는 사실은 경제 경쟁, 외교적 대책, 국제사회의 대화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이는 아태지역에서 창조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대항마를 부각시키거나 반중국 억지력을 조직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새로운 경계선과 기존의 분쟁지역 고착, 새로운 분쟁지역 형성 등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도는 부정적 의미가 크다.

작금의 상황은 마치 교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의 경직된 입장의 변화와 관련한 긍정적인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인도-태평양 독트린 자체는 물론이고 그 정치적 요소인 QUAD 포맷(미국, 일본, 인도, 호주)이 중미 간, 중일 간 축적된 깊은 경제적 상호연관성으로 인해 중국에 전략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인도와의 상호의존성 심화는 인도발 리스크도 낮춰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회요인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 중국, 인도는 SCO 회원국이자 러일중(RIC) 3자 협력 포맷에 참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무차관 및 국방차관급의 새로운 안보대화를 RIC-QUAD 포맷이나 보다 더 확대된 SCO-QUAD 포맷으로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올 수 있다. 인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QUAD 포맷 차

원의 대화에 러시아와 중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러시아가 아태지역 내에서 인도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인도 요인'을 부정적으로 활용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노선을 보다 더 세밀하게 조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알렉산드르 표도롭스키(A.N. Fedorovskij) IMEMO 아태지역연구센터 부장
- 원제 : Россия в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зии
- 출처 : IMEMO 시사 논평(2018.8.18)

---

# 시진핑 vs ‘분열된 미국’(Divided States of America) : 미국과 무역전쟁 속 중국의 새로운 발전단계

---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이 논문은 2018년 상반기 중국 발전에 나타난 주요 경향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 및 국가발전의 대내외적 요소들 간 상호작용 모델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경제 요소의 주요 특징은 이전과 동일하게 남아있으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장개혁을 지속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대내외적 요소들은 새로운 성격을 띠고 있다. 바로 시진핑의 개인 권력 강화와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공격적인 대외정책이다.

2018년 중반 무렵 중국이 구(舊) 모델의 교체라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착수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즉 ‘시장개혁-당내 민주화-중도적인 대외정책’에서 ‘시장개혁-권력 독점-공격적인 대외정책’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러한 모델에는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엄격함 사이에서 정치적 생명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조건에서 이러한

위험요소는 오히려 중장기 전망에서 나타날 수 있다.

본 논문은 새로운 국내정치 상황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국의 대외정책, 러시아와의 관계라는 3가지 주요 측면에 대한 변화 과정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내정치 상황

시진핑의 개인 권력을 질적으로 강화시킨 2017년 말의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와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간주된다.

그 특징은 경제와 정치의 또 다른 상관관계이다. 10~15년 전 중국에서는 경제와 정치개혁의 결합이 주요 주제로 논의됐고, 민주화 문제라 하더라도 사회 전체의 민주화가 아닌 당내 민주화 측면에서 검토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은 원칙적으로 변화됐다.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시진핑의 사상 연구를 목표로 한 당내 선전 및 중국 지도자를 격상시키는 문제가 급격하게 활성화됐으며, 이는 분명 마오쩌둥 시대의 단순한 문구 암기라는 구시대적 특성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검열 강화와 반대자 색출, 특히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 주제 토론에 대해 실질적인 차단 조치들이 나타나고 있다. 십중팔구 정부는 다가오는 2019년 6월 4일을 매우 조심스럽게 의식하고 있고(1989년 천안문 학생 시위 30주년), 대규모 시위를 예상하며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진핑이 천명한 것처럼 느끼는 하지만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경제 자유의 확대와,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전 시대의 정치 및 이데올로기적 자유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새로운 전략적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시에 만족스러운 경제 및 사회적 역동성이 유지되고 있는 한, 시진핑의 권력과 권위 독점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문제는 단기적 전망이 아닌 중장기적 전망에서 발생할 수 있다.

## 지방 통제 강화

일반적 경향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점차 지역 수준의 경제 및 사회적 과정에 대한 중앙화된 통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중국의 지방 권력은 어느 정도는 중앙 정부와 관계 없으며, 이것은 급격한 경제성장 단계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개별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하고, 중앙의 경제 및 사회정책을 실현할 때 지역적 특성을 조금 더 잘 고려할 수 있게 해주었

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날 대외적으로 통일된 중국은 실제로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중국 지방의 특별한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 것은 국가 전체 예산에 대한 기여이다. 예를 들어 2016년 국가 총수입에서 지방의 비중은 53.4%였고, 지출에서의 비중은 63.2%였다. 참고로 OECD 국가들의 해당 평균 지수는 각각 19.1%와 32%였다.

빠른 경제성장 기간에 그러한 시스템은 더욱 더 장점을 가졌다. 지방분권화는 아래로부터의 주도, 지방 간 경쟁, 혁신적 실험 등과 같은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도 지방권력이 어느 정도 독립적 권한을 갖는 3가지 주요 기능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째, 행정적 기능(중앙의 결정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둘째, 재정적 기능(지방 내 자금의 규모와 분배를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정치적 기능(중앙정책 내에서 전술적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다)이다.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변화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하에서 중국은 당면한 '비약적' 발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 힘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는 이러한 정책 요소 중 하나이다. 2018년 3월 시작된 행정부 개혁에 뒤이어 지방 통치에서의 변화도 뒤따르고 있으며, 이것은 시진핑에게 부패방지 운동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것이다. 지방 내 비중 있고 영향력이 강한 계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중장기적 전망에서 중앙과 지방 간 기능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전권 재분배는 중앙에 이익이 되도록 이뤄지겠지만 아직까지 그 비율이 어떠한 것인가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지방정

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단 중 하나는 이미 시작된 정부 관계기관의 개혁을 통해 설립된 국가감찰위원회가 될 것이다. 해체된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기능이 이곳으로 이전됐다. 새로운 조직은 중국 공산당 기구 내 관리와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에 대한 부패방지 조사 및 그 실행권을 갖는 고도의 행정적 위상을 갖게 됐다. 이것은 지방권력과 지방 관리들에 대한 행정 및 사법적인 통제 가능성을 높여준다.

## 기업에 대한 당 통제 강화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에서의 당 세포 메커니즘이 더 적극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2017년 말 전면 수정된 중국공산당 법령에서는 33개의 조항이 개정됐으며, 이 조항들에 따라 국영기업의 당 세포들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때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끔 돼 있다. 그 외에 주요 국영기업은 당 세포의 비서직을 수행해야 하고, 최고 권력층이 그 구성원에 포함돼야 한다. 개인기업에서 당 세포는 회사가 중국 사법기관의 요구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직업 동맹과 함께,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더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가지며).

## 미국과의 ‘무역 전쟁’: 중국 전선

2017년 말 중국 제19차 당 대회 직후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촉발했고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3월 총회 이후 심화된 미국과의 ‘무

역 전쟁’은 시진핑의 개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 구상을 근거로 한 공격적인 새로운 대외정책을 이행하는 데에도 매우 심한 타격을 입혔다. 트럼프는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세계의 ‘최고 지도자’는 거의 100년 전 소비에트 시인 마야콥스키가 기술한 것처럼,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미 분열국(Divided States of America)’이라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보여주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 경제를 위해서도, 중국 정부의 세계화 전략을 위해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와 완전히 단절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 미국의 무역 공세에 대한 시진핑의 이중적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 중국 정부에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대항할 수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 타협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주요 행보는 다음과 같다.

중국 정부는 2017년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미국이 25% 관세를 도입한 것에 맞대응해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주고 있고, 농산물을 포함해 여러 제품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 생필품 수입에 대한 관세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가전제품과 식음료, 화장품과 의약품을 포함해 1,449개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평균 세율은 15.7%에서 6.9%로 낮아졌다. 자동차 및 부품 수입 관

세는 각각 20~25%에서 15%로, 그리고 8~25%에서 6%로 낮아졌다.

동시에 중국은 EU와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세율 압력'에 대한 갈등 국면에서 유럽에도 이로운 것이다. 그러나 EU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중국에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 중국의 손실 가능성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에게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을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긍정적' 시나리오(미국에서 중국 제품 수입에 대한 현 관세의 제한적 도입 또는 증가)라는 조건에도 2018년 미국과의 무역 전쟁 결과 약 0.1~0.5 p.p.의 국내 총생산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 상황이 부정적으로 발전한다면(중국 수입품 대부분에 대한 수입 관세 도입) 손실은 중국 경제발전에 근본적으로 대략 0.5~1.0 p.p. 정도로 제지를 가할 수 있다. 이 때 유럽 및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어떤 국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은 세계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양측 모두 '전투적인' 미사여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도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미국 제품에 대한 해당 수입세율을 높이는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다시 미국은 전체 수입량이 이미 2천 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중국 제품에 대해 10% 규모의 추가적인

수입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르는 위협을 미국 전문가들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중국 제품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2018년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 속도는 약 0.5 p.p. 손실을 보고 있고 노동시장에서는 25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부정적 시나리오 시(미국이 45%의 수입 관세 도입) 1.0~1.2 p.p. 손실과 760만 개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것처럼, 모든 경우 중국이 얻게 되는 손실은 미국의 손실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는 '무역 전쟁'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중국의 혁신적 발달을 저지하려는 시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미국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 피터 나바로의 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주장대로 2025년까지 중국의 산업 생산 대부분이 하이테크 생산으로 이루어진다면, 그와 같은 중국의 개혁이 현실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중국 국가 프로그램 '중국 제조 2025'에 따르면 2025년까지 항공 우주 부문, 초고속 철도 및 설비 건설, 조선, 바이오 기술, 로봇 생산기술,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등과 같은 전략적인 하이테크 부문이 산업 생산의 70%를 차지해야 한다).

## 정보 전선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공격적인 새로운 대외정책의 주요 내용인 '일대일로' 구상에 대해 부정적 정보가 더 많아지고 있다. 미국의 선진국방

연구센터(C4ADS) 정책자문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구상은 무엇보다도 ‘일대일로’를 실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자국의 정치 및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할 목적을 띠고 있다고 발표했다.

C4ADS 분석가들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오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지부티에서 중국 자본이 투입된 15개 이상의 항구 건설 및 현대화 프로젝트를 검토했다. 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모든 프로젝트가 원칙적으로 상호 이익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 연구소에서 발표했던 유사한 내용의 보고서에는 특히 동유럽 국가들에서 중국의 경제 및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위험성이 언급됐다.

미국의 보고서에도, 독일의 보고서에도 구체적인 사실은 거의 제시돼 있지 않다. 중국 금융 연구소가 언급한, ‘일대일로 전략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차관 제공’이라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들만 인용돼 있다. 그리고 중국의 자본을 받아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수혜국의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위험에 대해 기술돼 있고, 중국에 대한 이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적 의존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인도 전문가들은 실행 계획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일대일로’ 개념의 주요 명제를(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중국 공식문서에 공표돼 있다) 아태지역에서 중국 군사력의 우선적 강화라는 자신들이 내린 결론의 증거처럼 해석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항구 및 해당 산업 인프라 구조에 대한 투자가 결국 중국의 정치

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지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결론도 인용하고 있다. ‘전략적 지지국가’의 도움으로 중국은 자국 군대가 해외에 주둔할 수 있는 거점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6대 특성’을 바탕으로(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이중 임무 프로젝트 발전 모델,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측의 전체적인 통제, 재정 통제, 불투명성, 불공평한 이익) 미국 C4ADS 전문가들은 다음의 결론에 이르고 있다. 중국 구상의 주요 목적은 경제 협력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 및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보전’에는 유럽 인사들도 가담하고 있다. 2018년 4월 중국 주재 EU의 28명 영사 중 27명이(헝가리 영사를 제외하고) 중국 구상을 비판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했다. 문서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표현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중국 자체의 이익에만 부합할 세계화 개념을 부여하고 싶어 한다,’ ‘이 구상은 예를 들어 남아도는 생산시설의 감축과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 안전한 원자재 확보 보장과 같이 절대적으로 중국의 대내정치 및 대내 경제적 목적을 추구한다’ 등이다.

이 문서에는 또한 만일 투명한 협약 원칙과 EU의 환경보호 및 사회적 표준이 지켜지지 않을 때, 중국과의 협력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다. 또한 중국은 예를 들어 중국의 막대한 자본과 투자를 위임받은 헝가리나 체코와 같은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이라는 방법으로 EU를 분열시키려는 노선을 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지금 유럽위원회는 ‘일대일로’에 대한 EU 국가들의 통일된 입장을 반영할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EU와 중국과의 무역 제한 문제와 중국기업에 유럽의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전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무역 장벽 축소에 대한 논의 대신 중국은 이미 EU-중국 간 투자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은 EU에서 생각하는 대로 중국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또한 EU의 관심에 반하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의 지적 재산권 규정의 '중간 영역'을 이용하고 있으며, 유럽 관료들의 불만을 이해하면서도 상황을 바꾸기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초 메르카토르 연구소의 보고서 이외에도 독일 국가산업통상협회와 공동으로 독일 무역투자청(Germany Trade & Investment)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여기서도 중국 구상은 엄격한 법적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국가들에 집중돼 있다고 언급돼 있으며, 중국의 금융기관이 제공한 투자액의 80% 이상을 중국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반적으로 여러 보고서들에 나타난 주요 비난은 중국의 성장모델이 중국의 설비 및 자원, 경영관리와 노동력의 수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 귀착된다. 중국의 자본으로 프로젝트를 실현할 때 수혜 국가의 참여 비중은 최소한이다. 일자리 및 지역 공급자들과의 관계 창출이 적은 것이다. 또한 진부한 비즈니스 환경, 지역 생산자들을 공급자에서 제외시키는 것, 중국 수급권자들의 의무 불이행, 국가 규제에 대한 중국 프로젝트의 불일치, 품질 낮은 설비 공급에 대한 불만도 존재한다. 그 외에 중국 기업이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가 아닌 영향력이

큰 정치 리더들과만 협조하며, 그런 까닭에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도 중국 정부에 실질적인 비난이 가해지고 있다.

여러 경우에서 중국의 권력은 정치적으로 침해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사적 표현을 통해 비판에 대해 반응하고, 자국 기업의 정책 모델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속과 광물, 화학제품 분야의 중국 관리소는 2015년 이미 대외적인 비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채굴 부문에서 외국인 투자를 실현할 때 중국 정부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안전 기술, 국가의 노동법 분야에서 지역 규범과 사업 이행 및 '인권 준수'에 대한 UN 원칙을 엄격히 따르도록 지시돼 있다.

## 중국의 반응

중국 정부에게 무역 전쟁 이외에도 '정보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2018년 중국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 심화 계획'에 따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분과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미디어그룹 '중국의 소리'를 만들고 있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에게 대외 정보정책은 국내 정보정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선전 분과에는 영화 부문(영화 제작과 보급, 수출입)에서의 검열 기능과 세계 속에서의 중국의 대외적 이미지 형성 역할이 이관되고 있다. 선전 분과의 통제 하에서 중국 중앙 TV, 중국 국제 방송, 중국 민족 및 민족 간 라디오와 같은 언론기관이 미디어그룹 '중국의 목소리'로 통합



되고 있다. 미디어그룹 직원 총수는 약 14,000 명에 달한다.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 외를 포함해 젊은 시청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새로운 매스미디어(블로그, SNS, 메신저 등)라 불리는 업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 때 ‘평시에도, 전시에도’ 사회적 의견을 통제하고 형성할 필요성을 전제로 하는 중국의 정보전쟁 전략 속에서 정보정책 활성화의 불가피성이 검토되고 있다. 중국 정보정책의 주요 대상자는 중국 국민들, 잠재적 경쟁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국민 및 인물들, 중립적 또는 제3의 국가와 기관이다.

중국 국가의 인터넷 통제시스템은 정보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외부로부터의 정보 흐름은 봉쇄되지만, 중국에는 외국 인터넷 세그먼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보 등록 모델은 서구의 유사한 것들에 포함돼 복제되며 프로그램 또는 현지 보도라는 공격적 방식이 환영받고 있다.

### 다른 각도에서의 문제 : ‘일대일로’ 구상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중국정부에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줄 수 있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 내 경제토론에서 또 다른 ‘뜨거운’ 문제들을 첨예화시키며 ‘일대일로’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2018년 상반기 중국에서는 다시 한 번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4월 광저우 시 회의에서 리뤄구 전(前) 중국 수출입은행장은 중국 구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국가가 프로젝트에

투자할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까지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국가들은 “이것을 이행할 수 없다. 20~100%의 지수가 권장될 때 그들의 평균 채무액은 국내총생산의 35~126%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2018년 6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원장 왕이밍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대규모 투자기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브릭스 신(新) 개발은행, 중국 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실크로드 재단) 투자 손실은 연간 약 5천 억 달러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 중국은 이전처럼 국가지역발전프로그램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징-진-지(京津冀) 계획(베이징시, 텐진시와 허베이 성)으로 이루어진 초광역 수도권 건설)과 향후 주강 삼각주 발전 계획(홍콩, 마카오, 선전(Shenzhen), 광저우 등으로 구성된 초광역 수도권) 프로젝트, 또는 양쯔강 삼각주 미래 발전 등을 위해서는 약 1조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의 새로운 총재 저우 샹오완은 ‘일대일로’ 전략의 투자 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국제기구 및 대규모 채권자들, 그리고 투자 센터(홍콩과 런던)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투자 다각화 및 새로운 투자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프로젝트의 주요 문제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아 있다. 개인 투자자들과 투자 채널의 제한된 참여, 낮은 소득, 프로젝트 참여 국가들의 복잡한 금융 제도와 관련된 개인 자본 유치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중국 전문가들의 제안

중 하나는 국제적인 개인 투자유치 제도와 각 프로젝트의 독립적인 신용 위험도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또한 각 나라에서 프로젝트 투자자들을 위한 국가특혜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다.

### 단순한 미중 포커 게임이 아니다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요소는 국내정치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압력을 통해 바로 그가 미국 비즈니스와 미국 지적자산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과의 개인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국내 정치 비판가들에게 바로 그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의 지도자와 함께 ‘일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방식의 ‘채찍과 당근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평탄하지 않은 미중 관계의 다양한 어려움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잘 알려진 예 중 하나로 실제로는 2018년 2/4분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충돌했던, 최근 발생한 중국기업 ZTE사를 둘러싼 사건을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4월 미 상무부는 ZTE사와의 협력을 7년간 금지했다. 이후 이 중국기업은 자사 업무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다. ZTE사에는 140개국 이상에서 온 약 75,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미국 내 이동전화 회사 중 4번째로 큰 납품사이며, 세계 3위의 전기통신 서비스 공급사이다. 또한 ZTE사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실현과 5G 세대 이동통신 발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트럼프는 이미 그와 중국

의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ZTE사가 미국시장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ZTE사를 둘러싼 미중 관계의 역사는 전 세계 두 경제 대국의 경쟁 관계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중국 경쟁자의 업무에서 비우호적인 것에 대한 미국 측의 경고, 중국인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 미국의 제재, 정치적 고위급에서의 문제 제기, 문제 해결 등이 그것이다.

미국 당국은 이미 2016년에 ZTE사에 업무위반과 예측 가능한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그때 ZTE사의 최고위층은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경계했다. 제재국인 이란과 수단, 북한, 시리아와 쿠바에 이동전화와 그 기술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더 이익이라고 생각한 미국의 제재를 불이행했던 과거의 경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2018년 미국 당국은 11억 9천 만 달러 규모의 벌금을 ZTE사에 부과했다. 이때 미국 관리들의 정보에 따르면 ZTE사 관리자들은 제재 조치 위반에 대해 중국 지도자들로부터 처벌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포상금을 받았다. 미국 당국의 대응 조치는 중국 ZTE사에 대해 더 이상 미국 기업의 지적자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위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시진핑과의 개인적 접촉을 통해 ZTE사의 문제를 정상화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미국 내 트럼프 반대자들의 비판을 야기했다. 비판자들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이란과 교역했고, 이 때문에 제재를 받은 기업과 상호 협력하면서 어떻게 이란과의 ‘핵 거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유럽 전문가들도 비슷한

질문을 제기한다. 이란과의 협력에 대해 유럽 기업들에 가해진 확실한 제재와, 중국의 ZTE사와의 문제를 조정하려는 트럼프의 시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러나 미국 내 청중들과 자신에 대한 국내 정치적 평가를 우선적으로 지향하는 트럼프의 '사적 외교'는 틀림없이 미국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우선권이다.

국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외교 행위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다. 첫째, ZTE사와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려는 트럼프의 시도는 5월 당시에는 트럼프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 직전, 그리고 지금은 만남 이후 미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시진핑에 대한 일종의 '선물'로 간주된다. 평양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밝힌 트럼프에게는 그가 혐오스러운 북한 지도자를 상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다짐한 약속의 이행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유권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도 트럼프는 시진핑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둘째, 미국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부품을 ZTE사에 공급하는 것에 대한 벌금과 공급 금지 조치는 미국 농산물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한 미국 측의 협상카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미국의 농업 지역은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

셋째, 트럼프 비판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금품 매수를 의심하고 있다. 그들은 올 5월 ZTE사가 'Mercury Public Affairs'로부터 22만 5천 달러를 공식적으로 차입했다는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이 회사는 트럼프의 대선캠프 고문 출신인 브라이언 란자가 미국 내에서 자

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영하고 있는 곳이다(이 회사는 제재를 받은 En+ 그룹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기통신 부문 프로젝트 입찰에서 이기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된 뇌물에 대해 미국 측이 ZTE사에 가한 비난에 비추어 그 행위의 비밀관성(예를 들어 리베리아에서 미국기업은 이미 입찰에 성공한 이후 ZTE사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다)과 미국 내에서의 스파이 행위(달라스 지방법원의 문서 191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돼 있다. '중국 우주항공 산업성은 학자와 사업가들, 경영자들로 위장된 정보 장교들의 첩보 업무를 위해 ZTE사를 설립했다')를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캔들은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ZTE사 자체와 다른 중국기업들에게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5G망 건설에 중국기업 화웨이의 참여 불허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영국에서는 Gardner Aerospace사에 의한 영국의 Northern Aerospace 흡수 거래가 정지됐다(이전에 중국 산업 재벌 Shaanxi Ligeance Mineral Resource가 구입했으며, 영국 더비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활동 중인 중국기업 ZTE사를 둘러싼 상황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자면, 중국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올 5월 미국 정부는 유사한 설비가 미국의 국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구실로 중국산 감시 카메라 구매를 금지시켰다. 지분 41%가 중국 정부에 속해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CCTV 설비 생산자인 중국의 항저우 하이커비전 회사 제품이 금지됐다(예를 들어 해당 설비는 미국의 포트 레너드 우드(Fort Leopard

Wood) 군사 기지와 주 카불 미국 영사관에 설치돼 있다. 중국기업 다화 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 테라 회사 제품도 비슷한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양측 관계에 나타는 온갖 불확실성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 형태의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중국 전자 상거래 기업 JD.com에 5억 5천 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에게 이런 계획은 중국의 국내시장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새로운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미국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상호 협력이라는 틀 속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EU 사이에 소매 무역 프로젝트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중국의 JD.com 사는 자사의 중국 내 주요 경쟁 상대인 알리바바와의 경쟁 차원에서 오히려 구글과 협력하고 싶어 한다.

### 중국은 무엇 때문에 비난받고 있는가?

미국의 공식문서(1974년 무역에 관한 합의 301조 내에서 기술 및 지적 재산권 이전과 신기술과 관련된 중국의 행위 및 정치, 사례 연구 결과)에는 다음의 논거가 포함돼 있다.

중국은 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맞교환해 기술 이전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은 기술 이전은 중국 파트너들과 미국 합동기업 설립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기업은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포함해 생산관리 분야에서 신기술을 사용

하고 있다. 즉, 중국의 논리에 따르면 기술 이전은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기업들의 자발적인 결정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혁신기업과 그들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진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문서에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은 자율 운행, 초고속 철도, 새로운 정보 기술 및 기계 제작, 새로운 원료, 생물 약제학, 새로운 에너지 자원, 농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에 의한 혁신적 선도 개발 전략으로 제시돼 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해당 부문에 보조금을 주고, 그 결과 미국기업들과 불평등한 경쟁 조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의 답변은 그러한 프로그램은 1970~80년대 일본에도 있었고 1960년대에는 독일과 미국에도 있었으며, 미국은 지금도 예를 들어 우주 항공 부문, 원자력 에너지, 약제학, 지오로케이션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은 국방 예산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미국의 국방예산이 거의 7천 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이 수치는 중국과 러시아, 영국, 인도, 프랑스, 일본, 독일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예산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액수이다.

기술 '도난'이라는 비난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은 저작권 보호 분야 규정시스템을 완성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외국 지적재산 사용에 대해 중국기업들이 지불한 대금 및 라이선스 비용 규모는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것은 최근 10년 동안 약 4배 증가한 수치이다. 그리고 IMF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외국 기술 소유권에 대한 지불 총액

면에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높은 순위의 나라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뿐이다. 일본과 싱가포르, 한국과 인도를 월등하게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 대외정책

미국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시진핑은 러시아와 노골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러시아와 관계를 더 폭넓게, '러시아 + 상하이협력기구' 국가들과의 빅픽처 속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2018년 6월 칭다오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과 그에 수반된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전통적인 내용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G7' 형태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보여줘야 했다.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비록 보여주기식 표현이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파키스탄 문제에 관한 중국-인도 관계의 갈등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이 참여할 때 상하이협력기구는 지역 안전 문제,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반테러주의 현안에서 이전보다 더 높은 협력 가능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짧은 기간(2018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세 차례 만남을 통해, 그리고 김정은이 트럼프와의 정상 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갈 때 국가 주석 전용기를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한반도에서 '중요한 게이머'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해체 문제에서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중반의 상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의 대책은 미국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해 보인다. 워싱턴은 중국에 대해 군사정책적인 무역 압박을 추가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비판을 첨예화하고 태평양에서 대규모 림팩(Rim of the Pacific Exercise) 국제 해군훈련에 중국을 초청하는 것을 취소하며, 대만에 무기 공급을 증가할 계획을 통해 중국 정부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

가까운 1~2년 내에 중국의 국내 발전과 국제적 행동 진로의 다방향성이 증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에서는 전통적 문제점들이 첨예화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긍정적 역동성이 지속될 것이다. 정치 이데올로기 영역에서는 시진핑 개인의 새로운 숭상에 대한 지식인 엘리트들의 불만이 점차 쌓여가겠지만, 그의 권력 독점에 관한 전술적 협박은 없을 것이다.

세울과 지적 재산권, 무역 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타협안을 준비하고, 그 결과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진핑은 '개인 외교술'을 활성화하고 이를 이용해 그는 트럼프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앞서 언급한 타협안을 찾으려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시진핑이 '체면 손상'을 입은 것에 더해 (2018년 시작된 '무역 전쟁'은 2017년 시진핑과 트럼프의 개인적 만남에서 긍정적 분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 발생했다),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긴장 국면으로 인해 단기적 전망에서 미중 관계는 2017년 첫 열 달 수준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이미 확대된 '러시아 +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빅픽처 속에서 러시아와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노골적인 노력

을 예상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이 상하이협력 기구의 역할을 이전과 다르게 강조할 것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온다. 러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기구로서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힘에 기반을 둔 기구로서 미국과 전략적 대결에서 중

국이 압박카드로 활용할 상하이협력기구인 것이다.

번역 :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sy@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A. Lukonin) 경제학 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 부장
- 원제 : Си vs «разъяняйтед стейтс оф Америка»: новая фаза развития Китая на фоне 'торговой войны' с США
- 출처 : IMEMO 발표논문, "World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2019) No.1 게재 예정

# 환태평양 지역의 발전 시나리오와 러시아의 시각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본 논문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특징의 연구와 예측에 관한 것이다. 향후 10년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포괄적인 다자간 무역·경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현재 아태지역에는 운전자 역할을 자처하는 몇몇 대규모 경제구상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정치와 사회·경제 발전에 대한 예측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키워드: 환태평양 지역, 아태지역 무역·경제 시스템, 안보, 경제, 협력

본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데에 있어서 '스마트 파워'(Smart Power, 생각의 힘)의 역할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다.

**연구 대상** - 아태지역 국가들의 국가 전략: 정치 엘리트 집단에 의해 이미 수립됐거나, 현재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전략. 이러한 국가전략에 대한 필자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전략은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 아태지역 국가들의 '반응'이다. 둘째, 국가

전략은 통치 계급의 '정치적, 경제적 야망을 실현하는 수단'이며, 리더십 확대, 다자간 포맷의 개발, 역내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간략히 말해 필자들은 아태지역 국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의 성패 여부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면이 제한된 관계로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는 연구의 전략적 목표는 일종의 '전략 공학'(strategic engineering)의 도구에 접근하는 것이다. 환태평양 지역(아태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국가적 이데올로기가 러시아에 바람직한 방

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스마트 파워,' '투 트랙, 1.5 트랙' 국제 교류 등의 방법이 고려된다.

또 하나의 목표는 다른 국가들의 전략에 따라 러시아의 아태지역 전략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예측 기간 - 향후 10년~15년.

본 논문의 '초과제(超課題)'는 중기적 전망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이 어떤 발전전략과 국제관계 정책을 구사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다. 만약 앞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즉 본 논문의 '초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러시아가 아태지역 정책을 계획할 때 위에서 언급한 '전략 공학'의 도구들을 이용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새로운 국제관계와 발전전략에 맞추어 러시아에 더 유리한 쪽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해서, 필자들은 러시아의 이해관계 지대의 위계를 정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러시아가 어느 지점에서는 대응을 서둘러야 하고, 또 어느 지점에서는 대응을 서두를 필요가 없는지, 즉 주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상황의 추이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환태평양 지역 내에서 책임 있고 협조적인 국가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태지역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합리화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다음의 사안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

**중국:**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포함한 대외정책 전략과 국내정치 발전 전략.

**한국:** 비핵화와 통일 문제.

**일본:** 전 세계 속에서 일본의 지위.

**APEC:** 역내 자유무역지대의 미래와 아태지역의 정치적 미래.

**ASEAN 국가들:** 지역적 역할.

**미국의 아태지역 정책:**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등.

'스마트 파워'가 어떤 방식으로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로 중국의 학자 린이푸 교수(前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견해를 언급할 수 있다. 2017년 '중국 경제 전망' 국제 포럼에서 린이푸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대한 '관심'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인프라 개발에 미국과 중국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대일로' 구상은 '글로벌 인프라 현대화를 통한 경제발전 보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사성에 근거해 린이푸 교수는 향후 미국과 중국이 세계적 인프라 개발과 현대화 사업에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린이푸 교수가 확신하는 바처럼 미·중 양국은 '이 분야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 환태평양 지역 정세 개관

향후 10년 간 아태지역의 무역·경제 시스템 구축에 주도적인 경향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명제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전제이다.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도, 아세안도 아태지역의 새로운 경제 현실의 구조적 토대가 되지 못할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은 미국이 탈퇴했고,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아세안은 여전히 하위 지역 조직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환태평양 지역에는 무역·경제 관계의 통괄적 조직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전략들이 관측될 것이다. 이 경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기간에는 역내 국가들이 대외경제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에 반하여 쌍무적 관계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은 2017년 1월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했다. 협정에 잔류한 11개국(호주, 브루나이,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칠레,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서명했다. 이러한 외교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을 잃은 것은 11개국이 안고 있는 주요한 경제적 패배이다.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내에서 이 두 국가의 경제 규모는 압도적이다.

중국 정부는 육로(‘일대, 일로’)와 해로(‘21세

기 해상 실크로드’)를 기반으로 하는 ‘일대일로’ 전략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육로의 방향은 유라시아 대륙에 집중돼 있다. 해상으로는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인도양과 남태평양으로 나가는 ‘청색 경제통로(Blue Economic Passage)’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중국은 자국의 전략에 더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성격을 부여하며 ‘일대일로’의 틀 안에서 북극정책도 개발하고 있다.

오바마 전(前) 미국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실현을 통해 중국에 대해 ‘규범적 압력’을 행사하려고 애썼다.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탈퇴한 이후의 변화된 상황에서 중국이 TPP-11에 규범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미결로 남아 있다.

아태지역 국가들과 쌍무협정을 체결하는 미국의 전략에 맞서 중국은 ‘일대일로’ 구상에 규범적 요소를 도입하는 방법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상황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의 전략이 질적인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생긴다. ‘일대일로’ 전략에 더욱 포괄적인 성격이 부여되고, ‘환태평양 및 환대서양 실크로드 파트너십’ 개념의 출현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환태평양 지역의 무역·경제 관계 시스템 구축의 동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이다. 중기적 전망으로 이 구상은 진전이 없을 것이다.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상은 역내 주도 국가들에게 예비적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것으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신(新)북방정책’ 구상이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아태지역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포괄적이고 초국가적인 성격의 통합된 단일 기구와 일관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전망에서 이러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서 민족주의적 경향과 자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역내 아시아 국가 전체에 위협이 되는 대규모 안보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한국과 일본에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에서 이것은 핵무기 비확산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소이고, 중국에 있어서는 기술적 성격의 문제이다.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남중국해와 중국·인도 국경 지역의 영유권 분쟁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경향이 관측된다.

환태평양 지역의 경제와 정치·군사적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중 관계에 달려 있다. 워싱턴과 베이징의 상호 협력 없이는 포괄적인 안보기구나 포괄적 경제기구와 플랫폼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개념적 틀을 두고 있다. 미 행정부는 국가안보전략에 ‘인도·태평양’이라는 용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미국과 인도의 협력 관계에 새로운 반중(anti-China)적 성격을 부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체제 하의 미국은 환태평양 지역에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펼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대만 문제,

항행의 자유 보장 등과 같이 미국의 국익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에만 개입할 것이다.

2018년 5월 3~4일에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협상의 목표는 양국 사이에 벌어진 무역 전쟁의 중단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이 났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향후 2년간 중국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를 2천억 달러 줄이고, ‘중국 제조 2025’ 프로그램에 포함된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을 멈추며, 지적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차별받지 않고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5%로 낮추고, 미국의 1974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기업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멈추고, 미국 첨단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상대 국가에 압력을 행사할 수단을 찾는 과정에서,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메카니즘이 아닌 미국 국내법, 즉 1974년 무역법 201, 232, 301조에 근거하는 경향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 정책은 수입 관세와 첨단기술 분야의 기업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다. 첨단기술 분야 제재의 사례로 중국 기업 ZTE를 들 수 있다. ZTE는 이란에 통신장비를 공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제3국가들은 대미(對美) 무역관계의 악화로 이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로 인해 발생한 제품 부족분이 다른 국가들의 제품으로 채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효과의 리스크가 높아진다. 일례로, 2018년 1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1974년 무역법 201조에 따라 4년간 태양광 패널과 세탁기에 대한 수입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입었다.

### 아세안 : 현황과 발전 전망

현재 아세안은 일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세안은 미국의 아태지역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지 않으며, 발전 모델이 고갈됐다. 또한 역내 아세안의 주도적 역할 하에 진행되는 다자간 협력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문가들은 아세안이 다음과 같은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아세안 사무총장의 역할을 국가원수 급으로 격상한다. 합의 원칙에서 벗어나 다수결에 의해 채택되는 구속력 있는 결의 체제를 도입한다. 아세안 현장에 가입과 탈퇴 절차 도입에 관해 수정을 가한다.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에 좀더 세계적인 성격을 부여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아세안 간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범유라시아(Trans-Eurasia) 파트너십 구상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이행한다.

아세안의 작업이 4차 산업혁명 과정, 즉 아세안이 통신, 기술, 자연재해 예측과 예방 및 극복 등과 같은 분야에서 향후 발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적응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 중국 : 대내외 정책

중국의 사회·경제와 정치 과정의 분석에 근거

한 중단기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리더십 문제에 둘 것이고, ‘일대일로’ 전략이 그 주요 도구가 될 것이다. 중국이 ‘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와의 전쟁’의 수호자로 나서려는 생각은 미국과의 대결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력 하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중국은 대외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싱크탱크’의 작업에 더 의지하고, 세계적인 학술·전문가 집단에서 그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 결과, 시진핑 주석의 개인 권력이 강화됐다. 시 주석의 이름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시 주석의 사상이 중국 공산당 당헌에 마오쩌둥, 덩샤오핑의 이름과 나란히 명기됐다. 2018년 3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중국 국가주석직의 2회 초과 연임 금지 규정을 철폐한 헌법 수정안을 채택했다.

전문가들이 종종 간과하는 두 번째 요소는 민족주의 경향이 고조됨에 따라 대만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만약 독립 ‘대만 공화국’ 건설을 지지하는 세력이 우위를 점할 경우, 이것이 중국의 안정적인 국내정치 발전을 해치게 될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이에 맞서 중국 측이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새로운 전략은 경제 회복과 대만을 중국 대륙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포함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도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

2022년 이후 중국의 관료 수뇌부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만 위기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자유주의적 접근법은 ‘대만을 내버려두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내에서 국내정치 위기가 발생할 위험은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나리오는 개연성이 없다.

## 일본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일본의 대외정책은 최소한의 움직임에 머물러 있다. 일본은 국내의 사회·경제·정치 안정성 유지를 지향하고, 아태지역의 리더십에 별 관심이 없다.

일본은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특히 침략국가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갖는 국민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국가를 지역 공동체에 통합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일본 정치의 관성 때문에 일본이 15~20년 이내에 지역 공동체에 통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미·중 파트너십 구축이 일본 내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 모색에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어 일본이 고립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중기적 관점에서 중국은 안보 분야에서 일본의 국익에 주요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에 긍정적인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양국이 제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분야는 지역 통합체 발전에 대한 협력,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법, 해상교통 안전 보장에 관한 것

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향후 10~15년간 일본은 미국의 군사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며, 주요 임무는 미군 병력의 병참지원과 대미사일 방어, 대테러 전쟁, 평화 구축 작전, 군사 훈련, 구조·수색 작업 분야의 협력이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에서 미·중 파트너십으로 인해 미국이 자국의 동맹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정치권은 이러한 사건 전개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체로 환태평양 지역 정세에서 향후 15~20년 간 일본의 역할과 대외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일본과 공동의 가치를 갖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일본이 TPP-11 협정에 서명한 것과 호주, 인도와의 정치·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 한반도 : 핵 문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환태평양 지역 안보의 주요 문제이다. 한국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불리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문화된 합의사항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 북한은 핵·미사일 무기 숫자를 정확하게 밝힐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미국뿐 아니라 북핵 문제와 관련한 6자회담의 모든 참가국이 주장하는 핵 폐기 절

차 '검증안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한반도의 비핵화' 명제는 기본 과제인 북한의 핵무장 해제와는 거리가 멀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현 인식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전에 이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던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북한은 비핵화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북한이 자국 안보의 위협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주한 미군, 남한의 군사 잠재력, 대북 반체제 선전 등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유엔의 대북 제재도 이에 포함된다.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계속하여 이른바 '인도식 핵 해법'을 얻어내려고 한다. 즉,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이미 2013년에 북한 헌법에 핵보유국으로 명시됨),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핵 협상을 진행하려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를 손상시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뿐 아니라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러시아와 중국의 이해관계에도 저촉된다.

남북 관계의 전개에서 2018년 상반기에 일어난 사건들은 전체적인 전략적 비전을 바꿔놓지 못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세 개의 기본 시나리오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

1. 심각하고 실제적인 군사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위협이 있는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핵심 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이 가능하다.

현재 이러한 시나리오의 전제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북한 측의 보복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2. 국제관리체제 도입. 이 시나리오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와 모든 관련국의 관심과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3.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금융 및 경제 봉쇄. 이 시나리오도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통일된 정책 하에서만 가능하다.

## 한국 : 남북통일 문제

개념적 관점에서 남북문제의 역학관계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북한 체제의 붕괴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북한 체제 붕괴는 한반도에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두 가지 기본 구상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할 시간을 두는 것으로, 그 결과 일정 기간 두 개의 정부가 공존해야 한다.

두 번째 구상은 유엔의 후원 하에 국제관리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적, 기술적 성격의 도발 행위를 하는 경우, 5개국(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북한정권 교체 메카니즘 구축, 위기관리, 총체적인 대북 제재 도입,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노력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다.

## 러시아의 전망

환태평양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중기 전략적 관점의 대외정책 분석에 근거하면, 역내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불균등하고 불균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을 보일 것이고, 미·러 관계는 파상적(波狀的) 성격을 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북핵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중국 쪽에 집중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도,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도 자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는 길을 찾고 있다. 러시아는 아시아 정책의 이론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적(知的) 작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첫째, 러시아는 경제 분야에서 공공 부문의 역할과 입지 문제에 대해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의 접근법을 연구하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지적 재산권 보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역내에서 이 분야의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미국, 일본, 한국과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같이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러시아가 개념적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적 형태로도 민관협력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외정책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

넷째, 러시아가 아시아 정책에 대한 명료한 비전, 환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과 입지, 러시아의 주도권 등을 제시하고,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의 대(對) 아시아 정책의 주요 장점 중 하나는 러시아가 사실상 역내의 모든 대화 포맷, 플랫폼, 기구들에 외교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토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영유권 요구가 사실상 없다(일본과의 도서 분쟁을 제외하면). 게다가 중국과 달리 러시아는 아태지역 국가 안보에 군사적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경제적, 정치적 차원의 관점에서 러시아의 아시아 정책이 불균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러시아가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처져 있지만, 정치적 관점에서 지적, 외교적 리더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외교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는 ‘5개국’의 통일된 태도를 고려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이 국가들과 협력할 가능성이 열린다.

그 외에도 환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 간 정치·군사적, 전략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세안의 참여 하에 역내 대테러 포맷을 구축하는 것이 실제적인 방안으로 제시된다. ISIS의 확산 방지와 동남아시아의 여타 테러 단체들과의 전쟁이 이 포맷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와 상거래에 관한 러시아 국내법을 APEC과 ‘일대일로’ 전략의 기본 방향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정치적 지원,

러시아연방 중앙과 극동지역 간 상거래 권한과  
책임 분배 또한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이 환태평  
양 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통합 과정에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촉진할 것이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V. Mikheev)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S.V. Ignatiev) IMEMO 선임연구원
- 원제 : БУДУЩИ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ТРАНСТИХООКЕАН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РОССИЙСКИЙ РАКУРС
- 출처 : Журнал Федерализм No. 2 (2018)

# 한러 협력의 역사적 사례

황성우

4선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8년 5월 7일 취임해 새로운 6년 임기를 시작했다. 1999년 12월 31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하야 성명을 발표하면서 총리였던 푸틴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2000년 5월 첫 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후 푸틴은 올해로 네 번째 대통령직을 맡아 재직하는 것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 시절(2008~2012)에 실세 총리로 최고 권력을 행사한 기간을 포함하면 푸틴 대통령은 앞으로 2024년 5월 초까지 약 24년간 대통령과 총리로 재직하게 된다. 푸틴 대통령의 4선을 두고 국내외 언론이 ‘21세기 차르,’ ‘현대판 러시아 황제’라고 표현하는 등 푸틴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약 67%의 투표율과 76%가 넘는 지지율을 고려해볼

때, 유권자의 50%가 넘는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푸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극단적으로 가정해도 유권자의 50%가 푸틴 대통령을 지지한 사실은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의 최우선 과제로 ‘교육과 복지, 보건’ 문제를 언급했다. 러시아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대외적으로는 그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줄곧 강조해 온 ‘강대국 러시아 건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푸틴 4.0 시대에 우리는 러시아와 어떻게 협

\* 이 글은 2018년 4월 23일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와 한국외국어대 러시아연구소가 모스크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푸틴 4기와 동북아시아의 미래: 상호의존과 대립”(Putin 4.0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Interdependency or Confrontation)에서 발표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력할 것인가이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했다. 이미 두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문제는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다. 그 접점은 두 정상이가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에서 찾을 수 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용어는 푸틴 대통령이 추구하는 ‘新동방정책’이고, 한국의 대러시아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용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新북방정책’이다.

2012년 5월 세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푸틴은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을 부분적으로 수정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정책적 비중을 높이고자 했다. 그가 새롭게 추구하는 대외정책의 방향은 2012년 2월 “러시아와 변화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러시아 일간지에 게재된 푸틴의 기고문과, 그해 5월에 발표된 “대외정책 실행 조치에 관한 행정 명령”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문건들을 통해 러시아 정부는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를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와 경제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것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추구하는 新동방정책의 골격이다. 실제로 19세기 말 제정러시아 정부는 동쪽 국경지역에 위치한 러시아의 부동항을 획득하려는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건설하는 등 만주와 한반도로 진출하려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 축적된 역사적 과업을 계승해 아태 국가들과 ‘新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극동 시베리아의 중심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sup>1)</sup>에서 新북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북방정책의 기본 개념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북방국가의 에너지, 전력, 교통,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해 통합적인 북방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新동방정책과 본인이 추진하는 新북방정책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고까지 말하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려는 新북방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연결해 남-북-러 3각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이른바 ‘나인 브릿지’(Nine Bridges, 9개의 다리들)를 제안했다. 9개의 다리들은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업 등 한국과 러시아가 직접 협력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들이다.<sup>2)</sup>

이렇듯 푸틴 4기의 러시아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사이에 진행될 기본적인 협력 형태의

1)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국제포럼으로서, 2015년 9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매년 1회 개최된다. 동방경제포럼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新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창설한 포럼이다. 2017년 9월에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약 50개국에서 4,0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26개 국가에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각국 정상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할트마긴 바트툴가 몽골 대통령이 참석했다.

2)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추진하고자 하며, 그 핵심은 ‘新남방정책’과 ‘新북방정책’이다. ‘新남방정책’은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아세안(ASEAN)과 인도와 협력 관계 속에서 파생될 폭발적인 시장 수요를 감안해 이들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고, ‘新북방정책’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등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밋그림, 즉 빅픽처는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만 남는다. 1990년 9월 한국과 당시 소련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진행된 협력 사업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수교 30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크게 내세울만한 성공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까닭에 본 글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협력 방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늘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과 러시아는 조선과 제정러시아라는 국호 아래 1884년 7월(음력 5월 15일)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수교를 전후해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통해 서로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수교가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 사이에 축적된 긍정적인 사례를 분석해 푸틴 4기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할 한러 관계의 새로운 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한 과거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교훈은 바로 이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글에서는 19세기 조러 수교시기에 극동 시베리아 내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한 네 가지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네 가지 사례는 한국인의 연해주 이주와 러시아의 이민정책,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 상호 보건 정책 공유, 국경 무역: 경흥과 우수리스크의 장터, 한러은행 설립 등이다.

## 극동 시베리아의 중요성: 한국과 러시아, 만남의 역사

1884년 7월 17일(음력 5월 15일) 조선과 제정 러시아가 ‘조러수호통상조약’(朝露修好通商條約)을 체결한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100년이 넘는 기간에 때로는 상호 동반자적 협력자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거나, 혹은 공식적인 국교 관계뿐만 아니라, 교류조차 하지 않으며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어둡고 밝은 역사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

공식 수교를 맺기 이전의 상황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 1654년은 공식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인이 처음으로 접촉한 연도이다. 국내 사학계에서 ‘나선정벌’이라고 부르는 알바진(Albazin) 전투가 1654년에 발생했다. 청나라 팔기군이 러시아군에 패배한 후 청나라는 조선에 원군을 요청했고, 청나라의 요청에 따라 전투에 참가한 조선군은 알바진 전투에서 1654년과 1658년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군과 교전했다. 이 당시 조선군과 러시아군은 서로의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전투에 참여해 상대방을 ‘대비달자’(大鼻鬚子)와 ‘대두인(大頭人)’이라 불렀다. 대비달자는 ‘코가 큰 몽골계 오랑캐’라는 뜻이고, 대두인은 ‘머리 큰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한국과 러시아인이 만난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1864년은 비루한 조국의 현실을 등지고, 한국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를 시작한 해이다.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발생한 굵직한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양국의 모습을 조감해보면, 첫째 약 360년 이전 첫 만남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에 대해

깊은 교감을 공유하지 못하고 '대비달자와 대두인'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동안 진행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차치하고, 지리적 근접성만 보더라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문화적 친화력을 증진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다.

둘째, 약 150년 이전에 조선 백성들이 비루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국경을 넘어 이주한 연해주를 포함해 확대된 공간인 극동러시아는 유럽러시아와 달리 상대적으로 양국 교류의 교두보 혹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공간이지만, 제국주의 시대 열강들의 세력 각축의 장, 스탈린 시대 강제이주, 소련 해체 이후 재정착 등 시련에 얽힌 과거의 시간 속에 맴돌며 미래의 모습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한소 수교 이후에도 중앙과 연방 정부 차원에 치중된 두 국가의 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동러시아는 소외돼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셋째, 조선과 제정러시아가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지 130여년이 지났지만, 35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강제병탄의 결과로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해버려 러시아와 국교를 지속할 힘이 없었으며, 식민지 공간에서는 양국의 국민들 역시 직접적인 교류를 맺지 못하고, 러시아는 좌익 민족주의자들의 선망의 국가이자, 문학과 예술을 통해 국내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동경의 대상에 불과했다. 한국이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동서 냉전이 데올로기라는 국제사회의 질서 속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맺지 못했다. 러시아는 북한 위주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반대로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대외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결과 한국과 러시아는 스포츠, 간접교역과 같은 제한된 범주를 제외하고는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 즉 당시 소련은 용어 자체도 한국에서는 금기시하는 단어였으며, 국내에서는 러시아를 선망하는 그 어떤 행동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다행히 1990년 9월 30일 한국과 소련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두 국가의 단절된 역사가 이어져 오늘에 이를 수 있었지만, 양국은 축적된 과거의 시간을 계승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 한국인의 연해주 이주와 러시아의 이민정책

한국인이 공식적으로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를 이주한 연도는 1864년이다. 1863년에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이주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있으나, 연해주의 중심 도시가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약 2,000km 떨어진 니콜라예프스크였기 때문에, 경비대장 레자노프(Rezanov) 중위가 보고한 서류가 1864년 2월 8일에 도착해 이주 공식 연도가 1864년이 됐다. 참고로 한국인들은 1914년 러시아 이민 50주년 행사를 연해주 주지사 곤다티(N. L. Gondatti)의 허가로 거행했다고 한다. 즉 1864년은 행정적으로 공식적인 이주 허가를 받은 연도라고 할 수 있다.

1860년 포시에트 항구 근처 노브고로드 마을에 경비초소가 세워지며, 한국인 이주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한국인 이주민을 환영했다. 주된 이유는 황무지 개간을 위해 노동력이 필요했고, 유럽에서 배편으로 수송하던 식량을 현지에서 자급할 수 있다는 기

대감 때문이었다. 1861년부터 러시아는 연해주로의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 주민세와 농지세를 20년간 유예하고 지방세는 3년간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1869년 함경도 지방에서 발생한 홍수와 때 이른 추위로 인해 5,000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우호적인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영토에 한국인 마을이 형성되는 것을 꺼려했으며,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서 경작할 땅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려했다. 더욱이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서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 강간, 체포 등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렇듯 러시아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으로 인해 잠시 이주민들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나, 한국인들의 이주 자체가 중지된 적은 없었다.

###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 : 상호 보건 정책 공유

한국과 러시아는 1884년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하기 이전에도 이미 비공식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 1882년 2월 17일 체결된 협정은 해당 지역에서 전염병이 유행(창궐) 할 경우에, 러시아와 한국의 지방 관리들이 그 사실을 서로에게 통보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협정은 당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정책을 총괄하는 기구(통리기무아문)의 승인도 받았다. 공식적으로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와 같은 협정을 체결한 사실은 이미 한국과 러시아는 국교 수립의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이 서구 열강 중에서 미국과 제일 먼저 수교한 이유는 황준헌이 쓴 『조선책략』 때문이었다. 일본 주재 청국 공사관이었던 황준헌은

국제정세에 어두운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외정책은 러시아의 침략성을 경고하면서,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속하며, 미국과 연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까닭에 1882년에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이 체결됐다면, 그때는 이미 러시아의 침략 의도에 한국 정부가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된 것은 이 전염병 공동 대처 협정이 일회성이자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미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 이후 중국에서 양국의 사절단이 만나기 시작해 서로를 알고 있었고, 1860년대부터 러시아와 조선이 국경을 마주하고, 한국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수집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비공식적인 국경 무역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1882년 협정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지방 정부 간 체결된 협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경 무역 : 경흥과 우수리스크의 장터

공식적으로 1864년에 한국인들이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양국의 국경지역에서는 소규모 무역이 시작됐다. 러시아 동부시베리아 총독부는 한국과 무역 거래를 바라고 있었다. 극동 러시아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군인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러시아나 유럽에서 수송해오는 것보다 인접한 국가에서 구입하는 것이 유익했기 때문이다.

1865년 러시아 외교부는 북경 주재 러시아 공사 블란갈리(A. E. Vlangali)에게 한국과 무역

표 1. 한국과 러시아 간 육상 무역 현황

(단위: 루블)

	1894	1895	1896	1897
러시아로 수출	127,826	140,260	113,545	202,370
조선으로 수입	210,028	252,362	148,459	132,666
총액	337,854	392,622	262,004	335,036

※ 러시아 남우수리 국경 행정관 마티닌(N. G. Matiunin)이 보고한 자료

에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어떤 방법으로 무역하는 것이 좋은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블란갈리 공사는 답변을 통해, 한국과 직접 교역을 하게 되면 중국이 불만을 갖게 되고, 서유럽 강대국들이 시기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그는 국경지대에서 소규모로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했다. 러시아 정부는 블란갈리의 의견을 존중하고, 한국과 공식적인 통상 협상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러시아 외교부는 동부 시베리아 총독 코르사코프(M. S. Kopsakov)에게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가 필요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과 교역을 위해 한국에 가는 러시아 상인들에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후 코르사코프는 1865년 여름 포시에트(Posiet) 초소에 근무하는 중위 겔메르센(P. V. Gelimersen)를 특사 자격으로 한국 지방정부에 파견했다. 이때 연해주에 근무하는 해군 소장 카자케비치(P. V. Kazakevich) 역시 겔메르센에게 서신을 주며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서신의 내용은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은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지방 거주민들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서신을 받은 경흥 군수 윤협은 겔메르센이 요청한 함경도 주지사와 면담을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외

국인은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한국 정부의 법 때문이었다. 하지만 윤협 군수는 서신을 함경도 주지사에게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르사코프는 극동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 육류 보급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한국 정부의 쇄국정책으로 공식적인 무역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겔메르센을 북경에 보내 블란갈리와 상의하도록 지시했다. 블란갈리는 당시에 한국과 러시아 국경지대에서 소규모 무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러시아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한국의 북쪽 지역이 홍수와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경작지를 찾고자 연해주로 이주하는 한국인들이 점차 늘어나자, 무역 거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공식적 무역에 만족하기로 했다.

당시 한국인들이 러시아에 판매한 물품은 주로 한우였다.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물건은 옥양목, 면, 구리, 주석 등이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1860년대에 한국인들은 한우 몇 마리를 포시에트로 가져가 판매했지만, 1880년에는 하루에 250~300마리의 한우를 판매했다고 한다. 1883년과 1884년에는 1년간 17,600마리의 한우가 팔릴 정도로 무역 거래가 활발해졌다. 1884년 공식적으로 수교한

이후 양국의 무역 거래는 크게 증가했고, 1888년 육로통상장정이 체결된 무렵에 양국의 무역 거래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렇듯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서는 공식 수교 이전에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유로운 거래가 이뤄졌다. 자발적 의지에 따라 상업이 발전해 양국의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것이다.

## 한·러 은행 설립

한러은행은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설립한 것이 아니다. 1894년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한 민영환 특사가 러시아에 요청한 300만엔 차관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획됐다. 세르게이 비테(S. Y. Witte)는 민영환의 요청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재무 상태를 조사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비테는 차관 제공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에게 차관 제공이나 재정고문 파견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상해 주재 러청은행 지점장이자 러시아 재무성 상무관인 포코틸로프(D. D. Pokotilov)는 한국 정부가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조브라조프(A. M. Bezobrazov) 역시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억제하고 중국의 만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에 양보만 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획득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측근들의 말에 따라, 비테는 국제상업은행장 로트슈테인(A. Y. Rotshtein)과 이 문제를 상의했다. 로트슈테인은 한국이 요청한 차관을 러청

은행에서 제공하지 말고, 한러은행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때 처음 한러은행에 대해 언급됐다. 그는 자본금 10만 루블로 한러은행을 설립하고, 한러은행을 통해 한국 정부에 차관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비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하자 동청철도회사와 러청은행 이사인 로마노프(P. M. Romanov)는 한국은 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라는 점을 들어 비테를 설득했다.

로마노프는 만주 북부는 요동반도와 한국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철도를 통해 요동반도에 있는 중국의 항구(대련)에 도달할 수 있고, 이 철도는 한국에 있는 항구까지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철도가 완성되면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철도부설권을 얻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먼저 한국에 대한 재정적 영향력을 러시아가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로마노프의 설득에 따라, 비테는 1897년 3월 3일 로트슈테인이 제안한 한러은행 설립을 승인하고, 러시아 대 극동정책의 방향을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의 남해안에 러시아의 부동항을 확보하는 정책으로 선회한다. 즉 비테는 경제적, 재정적 팽창정책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부동항을 확보할 목적으로 한러은행 설립을 추진했다.

처음에 로트슈테인이 제안한 한러은행의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한러은행은 10만 루블의 자본금으로 설립한다.
2. 자본금 10만 루블은 러청은행에 예치한다.
3. 한러은행의 총 주식 중 51%는 러시아 중

양은행에 5년간 예치하고 재무성은 주주 총회에서 51%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4. 동청철도회사는 여유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300만 루블을 한러은행에 예치한다. 이자율은 연 2%이다.
5. 한러은행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300만 루블을 대일 차관 상환 목적으로 대출해준다. 이자율은 연 6%이다.
6. 차액으로 발생하는 4% 이자는 한러은행의 예비기금으로 전용한다.
7. 한러은행의 예비기금은 은행 자본금의 증자로 재 출자한다.

이 계획안을 보면, 로트슈테인은 자본금 10만 루블과 대출금 300만 루블 등 총 310만 루블을 기본 자산으로 해서 한러은행을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로트슈테인은 러청은행을 한러은행의 주체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비테는 로트슈테인의 계획을 일부 수정해서 50만 루블을 기본 자산으로 하는 한러은행의 설립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그 결과 1897년 12월 17일(구력 12월 5일) 한러은행의 정관을 발표하고, 12월 20일 한국 신문에 개점 사실을 보도했다.

한러은행의 위치는 서울 정동에 있는 러시아공사관 건물이었고, 영업실적을 보며 지방 다른 도시에 지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1898년 1월 27일 러시아 대리공사 슈페이에르(A. N. Shpeier)는 한국의 외교부장관 조병식에게 한국 정부 및 다른 장관들에게 한러은행의 개점 사실을 알려주라고 요청했고, 한러은행의 초

대 지점장은 가브리엘(Gabriel), 대리는 카레닌(Karenin)이 임명됐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1898년 3월 3일부터 한러은행은 업무를 시작했고, 한국의 독립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두려워한 한국 독립협회의 반 러시아 시위 때문에 한러은행은 휴업에 들어가고, 4월에 폐쇄했다가, 결국 1901년 공식적으로 폐업했다. 그 결과 비테의 대한반도 정책은 실패했고, 니콜라이 2세는 시베리아 철도의 해양 출구 및 태평양 함대를 위한 부동항을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요동반도에 조차하기로 결정했고, 1898년 4월 25일 '로젠-니시 협정'으로 러시아는 한국에서 일본의 상공업 이익을 보장했다.

\*\*\*

한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Success Story를 만들어가야 한다. 100년이 더 지난 과거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상호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했다. 과거의 협력 사례를 통해 한러관계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할 수 있다. 진부하다거나 혹은 추구하는 방향의 선호나 정부의 의지 여하를 떠나 '나인 브릿지'와 '新동방정책'에서라도 접점을 찾아야 한다. 최근 울산과 포항에서 러시아 지방정부 간 협력사례를 만들고자하는 시도도 내딛는 첫걸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 러시아가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다.

· 황성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교수

#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 상원의장 특강 참관기

이양경

칼린카, 칼린카, 나의 칼린카...

2018년 10월 4일(목),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연방 상원의장의 강연이 진행된 한국의 국어대 미네르바 콤플렉스 홀 안은 학생들의 노랫소리로 가득 찼다.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학생들이 마트비엔코 의장을 위해 준비한 환영 인사에 마트비엔코 의장은 웃는 얼굴로 함께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환영의 꽃다발과 칼린카 노래와 함께 이 날 마트비엔코 의장의 강연이 시작됐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강연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바라보는 러시아의 시각, 남·북·러 3자 경제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주요 주제로 연설했다. 강연이 진행된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 안은 학생들과 교수님들을 비롯해 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 없었다. 준비해 둔 여분 의자가 모자라 학생들은 양 옆 계단에 모여 앉거나 뒤쪽에 그냥 서 있어야 했다. 러시

아 관련학과뿐 아니라 프랑수어과, 정치외교학과 등 전공이 다른 학생들까지 이번 특강을 듣기 위해 찾아왔던 것이다.

먼저 마트비엔코 의장은 한국과 러시아를 호랑이와 곰에 비유하며, 이 두 맹수가 극동에서 공존해 왔다는 말로 강연의 시작을 열었다. 이어 양국 간 정치, 경제, 문화, 학술 분야에서 교류의 중요성과 발전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특히 경제 분야의 교류를 중요하게 언급했는데, 마트비엔코 의장은 한·러 경제교류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한국기업의 인지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를 찾아오는 한국인 관광객 규모가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이며, 최근 극동지역의 관광객이 증가하고 블라디보스톡에 마린스키 극장, 트레치야코프 갤러리 분관이 설립됐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동시에 러시아가 현재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극동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선 및 농업 분야는 물론,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북극항로, 인프라 건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현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나인브릿지스(nine-bridges)를 통해 더욱 양국의 경제협력이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연에서는 학문, 교육 분야의 교류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와 한국 대학 간의 학생 교류는 물론, 학술적 교류에 러시아 당국은 힘을 쏟을 것이며, 양국의 정치, 경제 교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학술 분야에서 앞으로 더욱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마트비엔코 의장은 말했다. 특히 학문과 연구 분야의 교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마트비엔코 의장은 러시아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응용과학과 기술이전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양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러시아와 경제, 기술 교류를 한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은 대체로 에너지 분야 위주로 한정지어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마트비엔코 의장의 발언에서도 나왔듯이,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에만 의존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마트비엔코 의장은 문화 분야에서 2020년이 한·러 양국의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러시아 문화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고 러시아에서도 또한 한국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가 있었음을 설명했다. 러시아 내 한국 연구는 점점 더 발전해가는 중이며 현재 1차 사료인 난중일기, 삼국유사 등의 번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연설 중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과 러시아 모

두,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전통적, 도덕적 가치를 지켜온 공통점이 있으며, 이것이 양국 우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 내용은 연설 초반과 후반에 러시아와 한국의 공통점과 문화적 방향성을 강조하며 언급됐다. 이 말은 국가 간 공통점을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원하는 문화정책의 방향이 보이는 듯 해서 인상 깊었다.

특히 후반에는 앞선 언급에 덧붙여 러시아와 한국이 모두 자주적 국가이며 견고한 전통문화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은 민족의식을 확립하고, 국가 윤리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민족문화를 발전시키는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현재의 러시아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2018년 푸틴 4기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문화 분야에서 '정신적, 도덕적 가치와 러시아연방 민족의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러시아 국가정체성 강화'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마트비엔코 의장의 연설은 이 부분을 떠올리게 했다. 러시아가 서구의 문화와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 민족의식을 가진 국가를 추구하는 점과 그 방향성이 엇보이는 대목이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의 부당함, 정보전과 가짜 뉴스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화제가 이어졌다. 이 대목은 러시아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갈등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하며, "러시아는 남북 간 협의를 지지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다. 또한 마트비엔코 의장은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구축, 핵 군축 과정에 협력할 것이며 동북아 모든 국가의 이해를 고려한 집단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시간에도 남북문제는 빠지지 않는 화두였다. 첫 번째로 질문한 학생은 마트비엔코 의장이 지난 9월 러시아 사절단 대표로 방북한 바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마트비엔코 의장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 방향으로 구체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아니며, 국제사회도 북한의 평화적 행보에 맞추어 제재 조치의 수위를 낮춰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런 조건 하에서 철도, 항만 등의 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마트비엔코 의장이 계속해서 강조한 한-러 협력과 같은 맥락으로, 러시아는 더 나아가 남-북-러 삼각협력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여성문제와 성 평등에 관한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특이하게도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 한 질문이었는데, 마트비엔코 의장은 좋은 질문이라고 답하면서도 남학생이 이런 질문을 하다니 놀랍다며 즐거워했다. 러시아에 여성들이 고위관료 및 공공기관의 임원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정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마트비엔코 의장은 러시아에는 임원, 관료직에 여성 쿼터제는 존재하지 않으나 현재 양육 관련 정책, 출산휴가 등 여성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시행 중이라고 대답했다. 질문자는 또한 ‘러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서 마트비엔코 의장의 성공 비결을 물었다. 마트비엔코 의장은 최초의 여성 러시아 연방 상원의장으로, 질문자의 말은 결코 공치사만은 아닌 듯했다. 학생의 질문에 마트비엔코 의장은 단호하게 “나는 과정이 아닌 결과를 위해 노력한다”고 대답했다.

마트비엔코 의장의 강연은 한 시간 반을 조금 넘는 정도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러나 연설과 질의응답 시간 내내 한-러 협력에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경제협력을 비롯해 동북아의 긍정적 미래를 구상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었다. 마트비엔코 의장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에게 이번 특강은 현재 러시아가 추구하는 국가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됐을 것이다.



※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특강 영상은 러시아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이양경,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석사과정



#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 2018

Vol.2 | No.3 Fall

##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